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9 791196 651312  
ISBN 979-11-966513-1-2

비매출/ 무료

9334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북한사회변동 2019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보건

천경호·강채연·박상민·이혜원·정은미·임경훈·조용신 저

## 집필진

**천경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강채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 연구교수

**박상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혜원**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 과장

**정은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임경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조용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프로젝트 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북한사회변동 2019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보건

## 목차

### 제1장 / 연구 개요

1. 조사 목적	12
2. 조사방법 및 설문내용	14
3. 인구학적 배경변수들의 특징	18
4. 조사의 의의와 시사점	29

### 제2장 / 의식주와 정보화

1. 서론	34
2. 의식주 생활 실태	36
3. 정보화 실태	65
4. 계층별 주민생활 비교	71
5. 평가와 시사점	77

### 제3장 / 시장화와 경제적 자유

1. 서론	82
2. 시장화의 사회경제적 효과	84
3. 시장화의 사회경제적 분화	93
4. 시장의 연속성과 경제적 자유	105
5. 경제개혁과 경제발전	111
6. 평가와 시사점	116

### 제4장 / 보건

1. 서론	122
2. 북한 보건의료 실태	124
3. 북한 보건의료의 접근성 격차	128
4. 평가와 시사점	132

### 제5장 / 총론

부록 / 설문지	142
----------	-----

## 표목차


〈표 1-1〉	조사의 표본	14	〈표 4-1〉	북한의 단기 영양장애(Wasting) (1998-2007)	123
〈표 1-2〉	설문내용의 구성	17	〈표 4-2〉	북한의료기관의 실태(2018, 2019)	125
〈표 1-3〉	성별, 연령별 분포	18	〈표 4-3〉	북한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	127
〈표 1-4〉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20			
〈표 1-5〉	응답자의 탈북 전 최종거주지	22			
〈표 1-6〉	응답자의 재북 학력수준 분포	23			
〈표 1-7〉	응답자의 재북 직업 분포	24			
〈표 1-8〉	재북 당시 응답자의 당원 여부 분포	25			
〈표 1-9〉	응답자의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26			
〈표 1-10〉	응답자의 남한 친척의 유무 분포	27			
〈표 1-11〉	응답자의 결혼 상태 분포	28			
〈표 1-12〉	응답자의 자녀의 수 분포	29			
〈표 2-1〉	옷 구입처의 연도별 추이(2012-2018년)	47			
〈표 2-2〉	살림집 내구재 보유 현황에 대한 IPUS의 조사와 MICS 조사 비교	57			
〈표 2-3〉	계층별 식생활 비교(2019년)	73			
〈표 2-4〉	계층별 주식 곡물 배율 비교(2019년)	73			
〈표 2-5〉	계층별 고기 섭취 빈도(2019년)	74			
〈표 2-6〉	계층별 옷 구입 빈도(2019년)	75			
〈표 2-7〉	계층별 살림집 유형(2019년)	76			
〈표 2-8〉	계층별 가구 내 내구재 보유 비교(2019년)	77			

## 그림목차

〈그림 2-1〉 하루 식사 횟수 연도별 추이	38	〈그림 3-2〉 북한 거주시 가족수 대 직장인 수	86
〈그림 2-2〉 주식의 곡물 배율 연도별 추이	39	〈그림 3-3〉 직장에서의 평균수입	87
〈그림 2-3〉 고기의 섭취 빈도 연도별 추이	41	〈그림 3-4〉 직장 외 부수입(장사)	88
〈그림 2-4〉 식생활 종합 실태 연도별 추이	42	〈그림 3-5〉 월평균지출비중 추이(의식주)	89
〈그림 2-5〉 옷 구입 빈도 연도별 추이(2012-2018년)	44	〈그림 3-6〉 월평균지출비중 추이(교육/문화생활/저축)	90
〈그림 2-6〉 옷 구입 빈도(2019년)	45	〈그림 3-7〉 수입 중 뇌물비중	92
〈그림 2-7〉 옷 구입처(2019년)	48	〈그림 3-8〉 일상생활에서의 고민	92
〈그림 2-8〉 옷 원산지 연도별 추이	49	〈그림 3-9〉 상층비율에 대한 인식	94
〈그림 2-9〉 살림집 유형 연도별 추이	52	〈그림 3-10〉 중층비율에 대한 인식	94
〈그림 2-10〉 살림집 장만 방법 연도별 추이	54	〈그림 3-11〉 하층비율에 대한 인식	95
〈그림 2-11〉 가구(家口) 내 내구재 보유 현황(2019년)	57	〈그림 3-12〉 가장 잘 사는 도시 순위	96
〈그림 2-12〉 월소득의 지출구조 연도별 추이	59	〈그림 3-13〉 가장 못 사는 도시 순위	97
〈그림 2-13〉 남한 상품 경험 연도별 추이	60	〈그림 3-14〉 하위 4개 도시 순위의 변동관계	98
〈그림 2-14〉 자녀 사교육 경험 연도별 추이	62	〈그림 3-15〉 가장 잘 사는 도별 순위	100
〈그림 2-15〉 개인강습 분야별 경험(2019년)	63	〈그림 3-16〉 가장 못 사는 도별 순위	101
〈그림 2-16〉 가족 내 의사결정 구조(2019년)	65	〈그림 3-17〉 가장 잘 사는 직업(상위 1순위)	102
〈그림 2-17〉 휴대전화 보유율과 용도(2019년)	67	〈그림 3-18〉 가장 잘 사는 직업(하위 1순위)	103
〈그림 2-18〉 컴퓨터 이용 경험과 이용 장소(2019년)	69	〈그림 3-19〉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	105
〈그림 2-19〉 인터넷 이용 경험 연도별 추이	70	〈그림 3-20〉 주요 고수입원천	106
〈그림 2-20〉 주관적 계층의식 연도별 추이	72	〈그림 3-21〉 고수입원산지 국가별 비교	107
〈그림 3-1〉 북한 거주시 생활수준의 변화추이	85	〈그림 3-22〉 고수입원 근무기간	108

## 그림목차

〈그림 3-23〉 고수입원 애로사항	109
〈그림 3-24〉 경제적 자유의 제반조건	111
〈그림 3-25〉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	112
〈그림 3-26〉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2순위)	113
〈그림 3-27〉 경제발전을 위한 제반조건	115
〈그림 4-1〉 무상치료 만족도	127
〈그림 4-2〉 의료기관 이용 중 진료거절 경험	128
〈그림 4-3〉 의료기관 이용경험 중 진료거절사유	129
〈그림 4-4〉 의료기관 이용경험 중 뒷돈 준 경험	130
〈그림 4-5〉 의료기관 이용경험 중 자가치료 경험	131
〈그림 4-6〉 장마당이나 개인약국 통해 약을 구입한 경험	132



제1장  
연구 개요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1장 연구 개요

### 1. 조사 목적

기존의 많은 북한 연구는 권력 구조의 변화, 엘리트의 변동, 노선 및 정책의 변화 등과 같이 상부구조나 거시구조의 변화에 주로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 대한 비판적 또는 대안적 접근으로 최근 북한 일상생활의 변화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대두되고 있다. 개인 차원에서 또는 기층 사회에서 지속되는 일상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구조 및 행위와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연구는 사회 전체에 대한 평가와 개념화를 함축하고 있으며, 해당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 모색을 위해,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분석하고 방향성을 전망하기 위해서 기층 사회에서 꿈틀대고 있는 수많은 작은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일상생활의 연구는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통해 사회구조의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정치적인 변화를 포함해 북한의 점진적인 체제전환 가능성을 연구하며, 나아가 통일에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북한사회변동은 북한 사회구조의 유의미한 변화로 정의할 수 있으며, 사회구조는 규범과 가치, 행위와 관계, 그리고 문화적 현상 등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변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규범의 변화, 행위의 유형 및 관계 패턴의 변화, 새로운 문화적 현상의 등장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우리는 북한사회변동의 속도와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사회의 변동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 속도를 조절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또한 북한사회 변화가 어떤 미래를 향해 진행되고 있는가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은 지금까지 언급했던 북한사회변동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일 것이다. 북한사회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과제의 중요성과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북한사회의 폐쇄성에 기인한 연구의 장애물들은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극복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기준 약 3만 3천 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북한사회변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자원일 수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계적으로 활용가능하고 시계열적인 변화도 추적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를 설계하여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단편적으로 진행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계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하여 조사 직전 연도에 북한에서 나온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사회의 유의미한 구조적 변화를 측정하여 변동의 속도와 요인을 분석하고 변동의 방향을 전망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를 구축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내용은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 지역별 생활수준, 정보화, 시장화의 양상, 경제행위의 다양성, 사회계층의 분화와 이동,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정보 등을 포함한다.<sup>1</sup>

## 2. 조사방법 및 설문내용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의 사회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사용된 질문은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식사할 때 하루 몇 끼를 식사했습니까?” 또는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까?”라는 형식의 질문을 활용하였다. 비록 북한이탈주민을 조사대상으로 하지만, 이러한 형식의 질문으로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일반 북한주민의 삶의 양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표 1-1〉 조사의 표본

(단위: 명)

조사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탈북연도	6/13-7/16	5/20-7/7	5/22-7/6	6/10-8/8	6/8-8/6	7/20-8/31	8/9-9/6
2012	133						
2013		149					
2014			146				
2015				135			

<sup>1</sup> 2019년 북한사회변동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음을 밝힌다. (IRB No.1908/001-014)

조사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탈북연도	6/13-7/16	5/20-7/7	5/22-7/6	6/10-8/8	6/8-8/6	7/20-8/31	8/9-9/6
2016				3	132		
2017						83	
2018						3	114
2019							2
총 계	133	149	146	138	132	87	116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조사하려면 탈북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함께 2019년에 입국을 했더라도 정보의 부족 또는 왜곡 등의 영향으로 2011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보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사회의 실태 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타당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탈북 시점과 입국 시점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기억과 의식의 변형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사회변동조사는 표본의 구성을 조사연도 직전 연도에 탈북하여 남한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로 제한하였다. 즉, 올해 2019년 조사의 표본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탈북한 후 남한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로 제한하였다.

이처럼 조사 표본의 탈북연도를 제한함으로써 표집 과정과 방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모집단의 규모가 축소되어 동일한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표집으로 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통일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입국자는 2,401명, 2011년 입국자는 2,706명,

2012년 입국자는 1,502명, 2013년 입국자는 1,514명, 2014년 입국자는 1,397명, 2015년 입국자는 1,275명, 2016년 입국자는 1,418명, 2017년 입국자는 1,127명, 2018년 입국자는 1,137명, 그리고 올해 2019년에는 12월 현재 1,047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다.<sup>2</sup>

이 조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준수하며 조사 대상자들에게 조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한 후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가 이뤄지거나 조사 연구원이 직접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통일부, 전국의 하나센터 등 관계기관들 외에도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연례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올해로 여덟 차례 실시하고 있는 북한사회변동조사는 시계열적 데이터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설문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시의성과 보완성을 고려하여 몇 개의 문항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설문 내용은 크게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실태, 정보·통신 환경 실태, 시장경제 활동과 소득 실태, 경제개혁에 대한 인식, 사회보장 실태, 보건 실태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배경으로 구분되며, 세부내용은 <표 1-2>와 같다.

2019년 조사에서는 북한 주민의 보건, 의료 실태 범주가 추가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실태, 진료의 용이성, 약 구매 경험 등의 설문

문항들이 추가되었다. 또한 올해 설문조사에서는 가독성 향상과 설문 문항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항의 배치 재조정과 문항 내 남한식 표현 등을 수정하였다.

<표 1-2> 설문내용의 구성

범 주	설문내용	
의식주, 정보·통신환경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루 식사횟수</li> <li>주식의 구성</li> <li>고기 섭취 횟수</li> <li>의류 구매 횟수</li> <li>의류원산지</li> <li>의류 주요 구매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살림집 형태</li> <li>살림집 장만경로</li> <li>남한상품의 사용 경험과 품목</li> <li>소유한 정보통신 기기</li> <li>인터넷 이용 경험</li> <li>인터넷 이용 장소</li> </ul>
빈부격차의 요인과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 사회의 계층 구성</li> <li>지역의 빈부격차</li> <li>직업의 빈부격차</li> <li>월 평균 지출비용</li> <li>빈부격차의 발생요인</li> <li>일상생활의 고민거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기별 소속 계층에 대한 주관적 평가</li> <li>공식 수입과 비공식 수입의 격차</li> <li>수입의 주요 지출내역</li> <li>식생활 형편</li> <li>사교육 경험과 분야</li> <li>총지출에서 뇌물의 비중</li> </ul>
시장경제 활동의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수입 원천</li> <li>자재/원료의 원산지</li> <li>시장경제 활동의 애로사항</li> <li>고용노동의 실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유화의 대상</li> <li>경제침체의 이유</li> <li>국가발전을 위한 필요 요소</li> <li>소비 행동</li> </ul>
사회보장 및 보건으로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장 만족도</li> <li>의료기관 이용 실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료 실태</li> <li>의약품 구매 실태</li> </ul>

2 통일부, "통계자료-북한이탈주민정책"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검색일:2020년1월27일)

### 3. 인구학적 배경변수들의 특징

#### 1) 성별, 연령별, 탈북-입국기간의 특징

먼저 성별 구성을 보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 통계에서 북한이탈주민들 중 여성의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본 조사에서의 여성 비율은 그보다 낮다. 조사대상 중 여성의 비율이 2019년 약 65%, 2018년 56%, 2017년 47%, 2016년 62%, 2015년 61%, 2014년 66%, 2012년과 2013년에는 약 56%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 30대가 가장 많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입국 통계자료의 연령대별 입국 현황에서 20-4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조사 역시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대, 40대, 50대 순으로 연령대가 상승할수록 입국자 수가 줄어들었다. 10대의 경우 3명으로 지난해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3명 모두 여성이었다.

〈표 1-3〉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명,%)

연령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0대	1 (33.3)	2 (67.7)	2 (66.7)	1 (33.3)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3 (75.0)	0 (0.0)	0 (0.0)	3 (100.0)
20대	24 (52.2)	22 (47.8)	15 (33.3)	30 (66.7)	16 (36.4)	28 (63.6)	14 (26.9)	38 (73.1)	24 (51.1)	23 (48.9)	14 (42.4)	19 (57.6)	20 (54.1)	17 (45.9)

30대	17 (58.6)	12 (41.4)	13 (46.4)	15 (53.6)	20 (44.4)	25 (55.6)	16 (50.0)	16 (50.0)	24 (61.5)	15 (38.5)	11 (52.4)	10 (47.6)	9 (34.6)	17 (65.4)
40대	11 (28.9)	27 (71.1)	12 (30.8)	27 (69.2)	13 (35.1)	24 (64.9)	15 (44.1)	19 (55.9)	16 (59.3)	11 (40.7)	5 (50.0)	5 (50.0)	7 (29.2)	17 (70.8)
50대	7 (43.8)	9 (56.3)	6 (31.6)	13 (68.4)	6 (37.5)	10 (62.5)	7 (43.8)	9 (56.3)	5 (29.4)	12 (70.6)	5 (26.3)	14 (73.7)	5 (25.0)	15 (75.0)
60대 이상	0 (0.0)	4 (100.0)	2 (13.3)	13 (86.7)	2 (66.7)	1 (33.3)	1 (25.0)	3 (75.0)	1 (50.0)	1 (50.0)	0 (0.0)	0 (0.0)	0 (0.0)	6 (100.0)
합계	59 (44.4)	74 (55.6)	50 (33.6)	99 (66.4)	57 (39.0)	89 (61.0)	53 (38.4)	85 (61.6)	70 (53.0)	62 (47.0)	38 (43.7)	49 (56.3)	41 (35.3)	75 (64.7)

주: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연령별 그리고 전체 남녀의 성비를 나타내며, 합이 100이 넘는 경우는 반올림 오차(rounding-error)에 해당한다. 2011년과 2012년 조사의 연령대에 대한 코딩 오류 정정으로 연령 대별로 일부 차이가 발생하였다.

응답자의 탈북연도와 입국연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조사 대상자 전체는 2011년에 탈북하여 2011년에 입국하였다. 2013년 조사에서는 131명이 2012년에 탈북하여 2012년에 입국하였으며 2명은 2013년에 입국하였다. 2014년 조사에서는 149명 전원이 2013년에 탈북하여 이 중 141명이 2013년에 입국하였고, 나머지 8명은 2014년에 입국하였다. 2015년 조사에는 전원이 2014년에 탈북하여 이 중 129명이 2014년에 입국하였고 나머지 17명이 2015년에 입국하였다. 2016년 조사에는 135명이 2015년에 3명이 2016년에 탈북 하였다. 이 중 99명이 2015년에 입국하였으며 39명이 2016년에 입국하였다. 2017년 조사의 경우 2016년도에 탈북한 조사대상 132명 중 19명만이 2017년에 입국하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총 87명 중 84명이 2017년에 탈북하여 같은 해 68명이 입국하였고 19명은 2018년에 입국하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총 116명 중 114명이 2018년에 탈북하였고 2명만이 2019년에 탈북하였다.

〈표 1-4〉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시간

(단위: %)

조사연도 소요기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개월 미만	0.0	3.4	0.0	1.4	1.5	2.3	0.9
1개월	0.0	26.8	30.8	21.0	27.3	27.6	22.4
2개월	29.3	48.3	29.0	22.5	32.6	21.8	31.0
3개월	47.4	8.1	14.4	15.2	12.1	10.3	11.2
4개월	8.3	2.0	6.8	14.5	8.3	20.7	18.1
5개월	5.3	4.7	2.1	15.2	8.3	5.7	8.6
6개월	1.5	2.7	1.4	2.9	2.3	4.6	5.2
7개월	3.8	2.0	0.7	1.4	0.8	1.1	0.9
8개월	1.5	1.3	0.0	0.7	3.8	0.0	0.9
9개월	0.8	0.7	1.4	1.4	2.3	4.6	-
10개월	2.3	0.0	3.4	0.7	0.0	0.0	-
11개월	0.0	0.0	0.0	1.4	0.8	0.0	-
13개월	-	-	-	-	-	1.1	-
14개월	-	-	-	-	-	-	0.9
무응답	0.0	0.0	0.0	1.4	0.0	0.0	0.0
평균(개월)	3.37	2.26	2.49	3.33	2.82	3.06	2.90
전체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또한,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리는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응답자들의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기간은 각각 평균 3.57개월(표준편차=1.74), 3.37개월(표준편차=1.72), 2.26개월(표준편차=1.61), 2.49개월(표준편차=1.99), 3.33개월(표준편차=2.35), 2.82개월(표준편차=2.12),

3.06개월(2.33)이었다. 2019년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탈북-입국 기간은 2.90개월(표준편차=1.92)로 소폭 하락하였다. 달리 말하면 2019년 조사대상자의 82.7%가 탈북 후 입국까지 4개월이 걸리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이 비율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과 2017년, 2018년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각각 76.7%, 86.1%, 84.2%, 60.1%, 81.8%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올해의 경우 탈북 후 입국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이 소폭 하락하였으며 북한주민들이 탈북을 결심한다면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안에 남한으로 입국하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고향, 학력, 직업별 특징

북한이탈주민들 탈북하기 전 최종거주지는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양강도와 함경북도 출신으로, 2019년도의 경우 이들 지역 출신은 90.5%에 이른다. 통일부 자료(2019년 12월 말 기준)에 의하면 함경북도 출신이 59.2%, 양강도 출신이 17.5%, 함경남도 출신이 8.6%이다. 모집단 자체에서 함경북도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으며 최근에는 양강도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 2019년의 경우 양강도 출신의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역 편중 현상은 최근의 탈북 행위가 구조적 여건이 수월한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5〉 응답자의 탈북 전 최종거주지

(단위: 명)

북한의 출신지	조사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평양	1	3	3	5	2	2	0
개성	0	0	0	0	1	0	1
남포	0	2	1	2	1	1	0
평안남도	2	4	3	2	0	2	0
평안북도	6	0	3	1	1	5	0
함경남도	11	9	5	4	6	4	5
함경북도	51	53	64	58	33	20	18
자강도	0	1	0	0	0	0	0
양강도	58	72	60	63	84	52	87
황해남도	0	1	1	0	4	1	0
황해북도	1	2	4	0	0	0	2
강원도	2	2	2	3	0	0	2
무응답	-	-	-	-	-	-	-
합계	133	149	146	138	132	87	116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가장 많았다. 2013년 조사부터 응답자의 71.4%, 61.7%, 61.0%, 74.6%, 72.0%, 73.6%, 70.7%가 고등중학교 출신들이며,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은 약 16.5%, 13.4%, 19.9%, 13.0%, 7.6%, 5.7%, 6.9%를 차지하여 올해 조사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반적으로 2015년 이후 대졸자 이상 학력 비중이 지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 말 입국자 기준으로 재북 학력 현황을 보면 고등중학교

가 69.3%, 전문대 10.3%, 대학 이상 6.8%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통일부의 전체 모집단에 비해 비교적 높은 학력 수준의 분포를 보인다.

〈표 1-6〉 응답자의 재북 학력수준 분포

(단위: %)

교육수준	조사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대학교	16.5	13.4	19.9	13.0	7.6	5.7	6.9
전문학교	11.3	21.5	16.4	11.6	17.4	13.8	22.4
고등중학교	71.4	61.7	61.0	74.6	72.0	73.6	70.7
인민학교	0.0	2.0	2.1	0.7	2.3	6.9	0.0
무학	0.8	0.0	0.7	0.0	0.8	0.0	0.0
무응답	-	1.3	-	-	-	-	-
전체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한편 응답자 중 노동자 출신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장 많았다. 재북 직업이 노동자였다는 응답자들은 2013년 이후 각각 31.6%, 30.9%, 26.2%, 22.5%, 43.9%, 32.2%, 26.7%로 2019년 노동자 출신은 이전 년도 조사에 비하여 하락하여 2017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노동자, 농민, 가정부인, 장사, 사무원의 비율은 매년 73.6%, 75.2%, 74.3%, 72.4%, 68.1%, 74.2%, 72.4%였으며 2019년 조사에서는 68.9%로 집계되었다. 올해 조사에서는 노동자와 농민 비중이 줄어든 반면 작년 0%를 기록하였던 장사의 경우 8.6%를 기록하여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표 1-7〉 응답자의 재북 직업 분포

(단위: %)

북한에서의 직업	조사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노동자	31.6	30.9	26.0	22.5	43.9	32.2	26.7
농민	3.8	7.4	4.8	9.4	3.8	11.5	3.4
사무원	9.8	12.1	8.9	10.9	6.1	6.9	8.6
전문가*	8.3	3.4	5.5	7.2	7.6	0.0	1.7
학생	6.0	7.4	4.8	4.3	2.3	13.8	7.8
군인	4.5	4.7	4.8	8.0	5.3	3.4	3.4
외화벌이 일군	2.3	0.0	4.1	2.9	3.8	0.0	1.7
장사	13.5	4.7	20.5	12.3	9.8	0.0	8.6
가정부인	16.5	18.8	11.6	13.0	10.6	21.8	21.6
무직 및 기타	3.8	10.1	8.2	9.4	6.8	10.3	16.4
무응답	-	0.7	0.7	-	-	-	-
전 체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 전문가에는 교원, 의사, 기술자 등이 포함됨

노동당 당원이 아니었다는 응답자들은 2013년 이후 각각 85.7%, 85.2%, 81.4%, 81.2%, 80.3%, 83.9%, 87.1%로 조사되었다. 2013년 조사 대상자 중 당원 19명을 직업별로 분류해보면 사무원 6명, 노동자 5명, 전문가 2명, 군인 2명, 농민, 학생, 장사, 가정부인 등이 각 1명씩이었다. 2014년에는 노동자 7명, 사무원 4명, 군인 3명, 학생 2명, 농민, 전문가, 장사, 가정부인 등 각 1명씩 총 20명이 당원이었다. 2015년에는 노동자 10명, 사무원 5명, 전문가 4명, 군인 2명, 외화벌이 일군 1명, 장사 2명, 가정부인 2명 총 26명이 당원이었다. 2016년 조사에서는 노동자 5명, 농민

3명, 사무원 8명, 전문가 1명, 학생 1명, 군인 5명, 가정부인 3명 총 26명이 당원이었다. 2017년 조사에서는 전체 당원 24명 중 노동자 11명, 농민 1명, 사무원 3명, 전문가 2명, 학생 2명, 군인 3명, 외화벌이 일군과 가정부인 각 1명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도 조사결과 전체 12명의 당원의 직업구성은 노동자 4명, 농민 2명, 사무원 3명, 학생, 군인, 가정부인 각 1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2019년 조사에서는 총 13명의 당원 중 노동자, 사무원, 학생, 군인, 외화벌이 일군, 장사, 가정부인이 각각 6명, 1명, 1명, 1명, 1명, 1명, 2명을 차지하였다.

〈표 1-8〉 재북 당시 응답자의 당원 여부 분포

(단위: %)

당원여부	조사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원	14.3	13.4	17.9	18.8	18.2	13.8	11.2
후보당원	0.0	0.7	0.7	0.0	0.8	0.0	0.0
비당원	85.7	85.2	81.4	81.2	80.3	83.9	87.1
무응답	-	0.7	0.7	-	0.8	-	0.9
전 체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 3) 탈북 후 북한소식 인지 및 남한 친척의 유무

탈북 후 북한이탈주민들의 북한 소식에 대한 접근성은 이동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탈북 후 북

한 소식을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는 응답이 2013년 조사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다가 2015년 조사에서는 다소 감소하여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16년 조사에서는 다시 증가하였지만 이후 2017년과 2018년 조사에서는 가파르게 하락하였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의 접할 수 없었다는 응답은 2013년 조사 이후 20%대 내외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22.6%, 2014년 24.8%, 2015년 19.3%, 2016년 26.1%, 2017년 20.5%, 2018년 19.5%, 2019년 22.4%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거의 접할 수 없었다”는 응답 비율은 2013년 20.3%, 2014년 17.4%, 2015년 25.5%, 2016년 23.2%, 2017년 23.5%, 2018년 17.2%, 2019년 21.6%로 조사되었다.

〈표 1-9〉 응답자의 탈북 후 북한의 소식에 대한 접근성

(단위: %)

북한소식	조사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22.6	24.8	19.3	26.1	20.5	19.5	22.4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7.1	57.7	55.2	50.7	56.1	63.2	55.2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0.3	17.4	25.5	23.2	23.5	17.2	21.6
무응답	-	-	-	-	-	-	-
전 체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일반적으로 남한에 먼저 이주한 가족이나 혹은 남한에 있는 친척들이 탈북자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흡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탈북하기 전 남한에 거주하는 친척이 있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들은 2013년 65.4%, 2014년 69.1%로 지속 증가 후 2015년 41.8%로 감소하였다. 2016년

조사에서는 60.9%로 증가하여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지만 2017년 51.5%로 감소하였고 2018년 조사결과 다시 소폭 하락한 50.6%를 기록하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남한에 먼저 이주한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는 비율이 70.7%로 약 20% 상승하였다.

〈표 1-10〉 응답자의 남한 친척의 유무 분포

(단위: %)

남한 친척	조사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없다	34.6	30.9	58.2	39.1	48.5	49.4	29.3
있다	65.4	69.1	41.8	60.9	51.5	50.6	70.7
무응답	-	-	-	-	-	-	-
전 체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응답자의 결혼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표 1-11〉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현재의 결혼 상태를 묻는 항목에는 결혼(동거 포함), 미혼, 이혼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3년 조사에서 미혼의 응답자들은 2012년보다 8.1% 감소한 37.6%였으며, 결혼은 9.3% 증가한 53.4%였다. 이혼한 북한 이탈주민들도 9.0%에 이르렀다. 2014년에는 미혼이 30.9%, 결혼이 55.0%였다. 2015년에는 미혼이 더욱 증가하여 39.0%였으며, 결혼은 42.5%로 감소한 반면 이혼은 17.8%로 증가하였다. 2016년 조사에서도 미혼이 증가하여 42.0%였으며, 결혼은 47.1%로 약간 증가하였다, 반면 이혼은 2015년보다 감소하여 10.9%였다. 2017년의 조사에서는 미혼과 결혼이 각각 40.2%, 45.5%로 2016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이혼의 경우 13.6%로 2012년 대비 4.1%가 증가하여 그간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증가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조사에서는 미혼 50.6%, 결혼

41.4%로 그간의 추세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나 이혼의 경우는 5.7%로 역대 조사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올해 2019년 조사에서는 미혼 비율이 33.6%로 급감한 반면 결혼 비율은 52.6%로 지난해 대비 11.2% 증가하였다. 이혼 비율 또한 13.8%로 지난해 5.7%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1-11〉 응답자의 결혼 상태 분포

(단위: %)

결혼상태	조사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미혼	37.6	30.9	39.0	42.0	40.2	50.6	33.6
결혼(동거포함)	53.4	55.0	42.5	47.1	45.5	41.4	52.6
이혼	9.0	14.1	17.8	10.9	13.6	5.7	13.8
무응답	-	-	0.7	-	0.8	2.3	-
전 체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응답자들이 자녀가 있는 경우 남과 북에 있는 모든 자녀의 수를 조사하였다. 〈표 1-12〉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2013년 56.4%, 2014년 57.0%, 2015년 56.8%, 2016년 52.1%, 2017년 55.3%, 2018년 43.6%, 2019년 51.8%의 응답자들이 1명 또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013년 조사에서 이혼 혹은 사별에 의한 편부모 가구 수는 12가구이며, 2014년 조사에서는 19가구, 2015년 조사에서는 26가구, 2016년 조사에서는 13가구, 2017년 조사에서는 18가구였다. 2018년 조사에서는 이혼 혹은 사별에 의한 편부모 가구 수가 15가구, 2019년 조사에서는 16가구로 집계되었다.

〈표 1-12〉 응답자의 자녀의 수 분포

(단위: %)

자녀의 수	조사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명	38.4	34.2	39.7	43.5	43.2	52.9	43.1
1명	32.3	27.5	35.6	33.3	36.4	24.1	39.7
2명	24.1	29.5	21.2	18.8	18.9	19.5	12.1
3명	4.5	6.7	2.1	4.3	0.8	3.4	0.9
4명	0.8	1.3	1.4	-	0.8	0.0	2.6
무응답	-	0.7	-	-	-	-	1.7
전 체	133명	149명	146명	138명	132명	87명	116명

#### 4. 조사의 의의와 시사점

북한사회변동조사는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민들의 삶과 북한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년 조사를 진행하여 시계열 자료를 축적하고, 변화와 지속성을 찾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사회를 이해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들의 고향이 일부 국경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 북한 내륙에서 생활하




는 주민들의 시각과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시각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해석할 때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조사를 통하여 제시되는 결과를 북한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인식하는 등 성급한 일반화는 경계해야 한다. 외부 정보를 용이하게 접하고 국경을 건너기 수월한 지역의 주민일수록 국내의 환경 변화에 민감할 것이며, 이들의 가치판단과 행동 양식은 다른 지역 주민의 것과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제한점들은 오히려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대응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참조사항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조사가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한계로 시간의 경과에 의한 표본의 의식변형이 있을 수 있다. 이 문제로 인한 영향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이 조사에 참여하는 표본은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구성된다. 매년 북한 사회의 미시적 변화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입국연도가 아닌 탈북연도를 기준으로 동일연도에 탈북한 사람들을 표본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년 북한 사회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북과 입국 사이 시간의 경과로 발생하는 의식의 변형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의식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 설문지의 질문을 재북 시기로 회귀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러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최선의 분석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연구 설계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읽어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적절한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최대한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제2장  
의식주와 정보화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2장 의식주와 정보화

| 정은미 통일연구원

### 1. 서론

2000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작으로 북한에서는 시장이 합법화되고 시장 경제적 요소들이 경제 분야 전반에 도입되었다. 계획경제 밖에서는 비공식 경제영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집단이 아닌 개인이 중요한 경제 주체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여성들의 상업 활동 및 비공식 노동시장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10여년 이상 지속된 김정일 정권의 ‘선군정치’로 인민의 삶은 매우 궁핍했다.

2011년 말 갑작스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최고 권력을 승계 받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짧은 정치 경력을 만회하고 인민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인민생활 향상’을 약속했다.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첫 육성 대중 연설에서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부친인 김정일과 달리 그는 조부(祖父)인 김일성과 같이 신년사를 육성으로 발표했는데 2013년 그의 첫 신년사에서 “인민들에

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어야 합니다”<sup>3</sup> 라며 인민생활 개선을 재차 강조했다. 제7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농업과 경공업의 발전, ‘사회주의문명’ 건설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과학기술, 특히, 정보기술이 중시되었다. 경제에서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가 강조되었다. 2008년 이집트의 오라스콤 회사와 합작하여 만든 ‘고려링크’라는 이름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이동전화 사용자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유니세프(UNICEF)와 북한 중앙통계국이 공동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북한 전체 가구 중 69%가 이동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양의 경우는 90.6%의 가구가 이동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2018년에는 휴대전화에 ‘미래’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하면 Wi-Fi(공중무선망)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김정은 정권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1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북한사회변동조사’는 김정은 정권의 출범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북한사회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을 비롯해 가계경제 운영과 소비생활, 그리고 정보화 실태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결과를 다룬다. 그리고 일부 주요 문항들의 경우 계층 변수와의 교차 분석한 결과를 상세히 기술

3\_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2013년 1월 1일 1면

4\_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DPR Korea and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s Report*, Pyongyang, DPR Korea: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and UNICEF, June 2018, p.31.

하였다. 또한 본 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설문 문항들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지표들을 사용한 국제조사의 결과와도 비교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일부 조사 결과에서는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 조사 결과에서는 선진되고 있는 정책 성과와 현실의 유리(遊離)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 2. 의식주 생활 실태

### 1) 식생활

김정은 정권이 약속한 인민생활 향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먹는 문제’였다. 그는 2013년 첫 신년사에서 농사에 국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해인 2014년 신년사에서 농업은 경제 분야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었다. 특히, 2014년은 김일성의 ‘농촌테제’ 발표 50주년의 해로써 농업 생산이 특히 중요했다. 같은 해 3월 5일 토지개혁법령 발표 68주년을 맞아 『로동신문』의 논설에서 “쌀은 국력이고 사회주의다”라고 언급할 정도로 김정은 정권은 초기부터 ‘먹는 문제’ 즉, 식량 생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생긴 배고픔의 트라우마는 갓 출범한 김정은 지도부의 권력 안정에 가장 아픈 부분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젊은 지도자의 ‘먹는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추진 의지 때문인지 본 조사에서 북한 주민의 식생활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의 식생활 실태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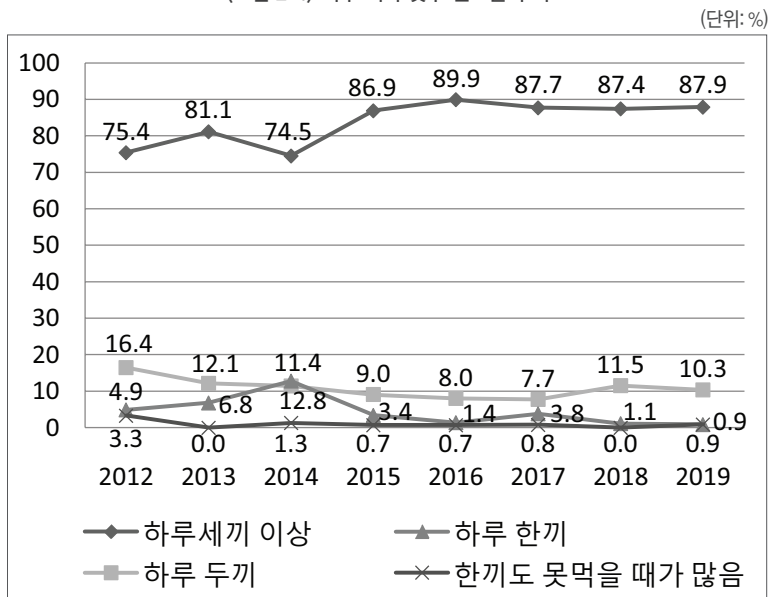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하루식사 횟수, 주식의 곡물 배율, 고기섭취 빈도, 식생활 종합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조사했으며 그 결과는 후술한 바와 같다.

#### (1) 하루 식사 횟수

2019년 조사에서 하루 세끼 이상의 식사를 했다는 응답률은 87.9%로 나타나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림 2-1>에 나타나듯 하루 세끼 이상의 식사 응답률은 2014년 74.5%로 최저점을 기록했으나, 2015년에 86.9%로 크게 오른 이후 2016년 89.9%, 2017년 87.7%, 2018년 87.4%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끼도 먹지 못했다는 응답률은 2015년 이후 1% 미만의 응답률 추세를 유지함으로써 결식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018년에 발표한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18년 농림어업 생산량이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8년에 북한에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조사에서는 전년대비 식생활의 양적 감소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간한 『북한농업동향』(21권 2호, 2019년)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KDI북한경제리뷰』(2019년 8월호)에 의하면, 2018년에 시장의 곡물 가격이 안정되었고 곡물, 밀가루, 식료품 수입 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 환경 때문에 농업 생산량 감소가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에서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 이후 대북제재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생활에서의 양적 감소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은 대북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그림 2-1〉 하루 식사 횟수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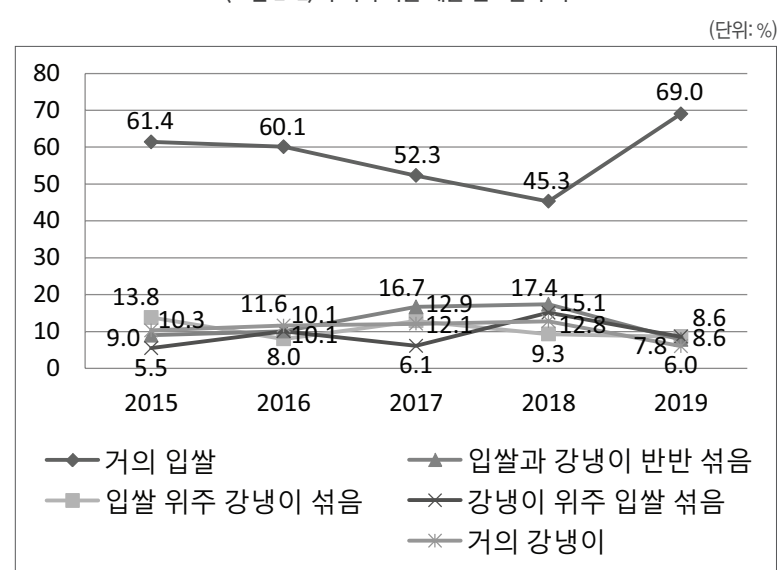


(2) 주식의 곡물 배율

식생활은 양적 측면 외에도 질적 측면에서 측정해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식생활의 질적 측정을 위해 주식의 곡물 배율과 고기 섭취 빈도를 조사했다. 우선, 주식의 곡물 배율을 보면, 〈그림 2-2〉에서 나타나듯 주식으로 “거의 입쌀을 먹었다”는 응답률이 2019년에 크게 상승했다. “거의 입쌀을 먹었다”는 응답률은 2015년에는 61.4%였으나 2016년 60.1%, 2017년 52.3%, 2018년 45.3%로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는 69.0%로 급상승하여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9년 조사에서 입쌀 섭취 응답자의 증가는 쌀 시장가격의 안정과 더불어 소득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의 소득 수준을

비교해보면, 2018년 조사에서는 비공식 월 소득이 100만원 초과인 응답자의 비율이 14.9%였는데 반해, 2019년 조사에서는 23.3%로 나타났다.

〈그림 2-2〉 주식의 곡물 배율 연도별 추이



(3) 고기의 섭취 빈도

1990년대에 발생했던 대규모의 아사와 기근, 그리고 대량의 북한주민의 국외 탈출 행렬로 인해 북한은 ‘빈곤국가’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 2012년 세 개의 국제기구들(WFP, UNICEF, WHO)이 연합하여 2012년 9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실시한 현지조사의 결과인 ‘2012년 북한 전국영양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북한주민의 영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5세-49세 연령대의 저체중 여성들의 경우 탄수화물 위주의 곡물 섭취율은 99.6%인 반면에, 육류와 생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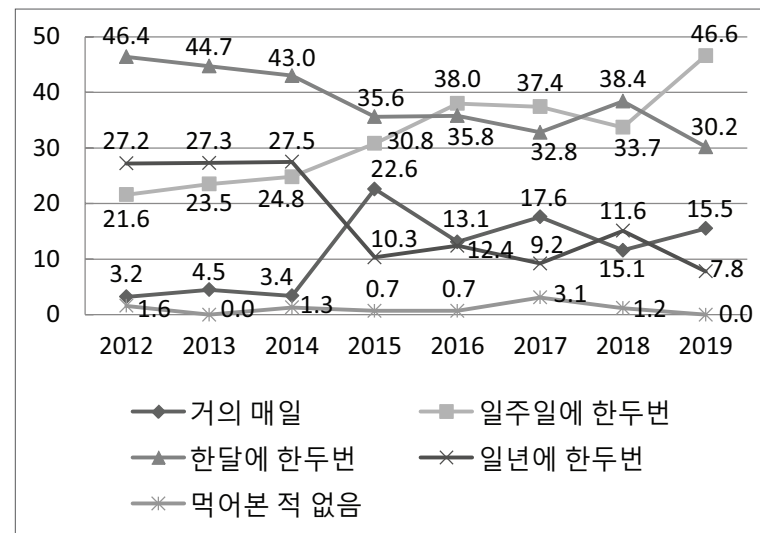
섭취율은 40.4%, 계란 섭취율은 7.7%에 불과해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본 조사에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북한주민의 고기섭취 빈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그림 2-3>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거의 매일 먹었다’는 응답률은 2012년 3.2%에서 2019년 15.5%로 12.3%p 상승했다.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먹었다’는 응답률은 2012년 21.6%에서 2019년 46.6%로 25%p 상승했다. 이처럼 고기섭취의 양적 증가는 북한주민의 영양상태 개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젠더 간 영양불평등 문제는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별 고기섭취 빈도를 비교해 보면, ‘거의 매일’과 ‘일주일에 한두번’의 응답을 합한 비율이 2012년에는 남성 27.3%, 여성 22.8%로 4.5%p의 격차가 발생했다. 그런데 2019년에는 남성 70.7%, 여성 57.3%로 13.4%p의 격차가 발생해 7년 사이에 남녀 간 고기섭취 빈도의 격차가 더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과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생활에서 젠더 간 불평등 구조는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2-3> 고기의 섭취 빈도 연도별 추이

(단위: %)



#### (4) 식생활 종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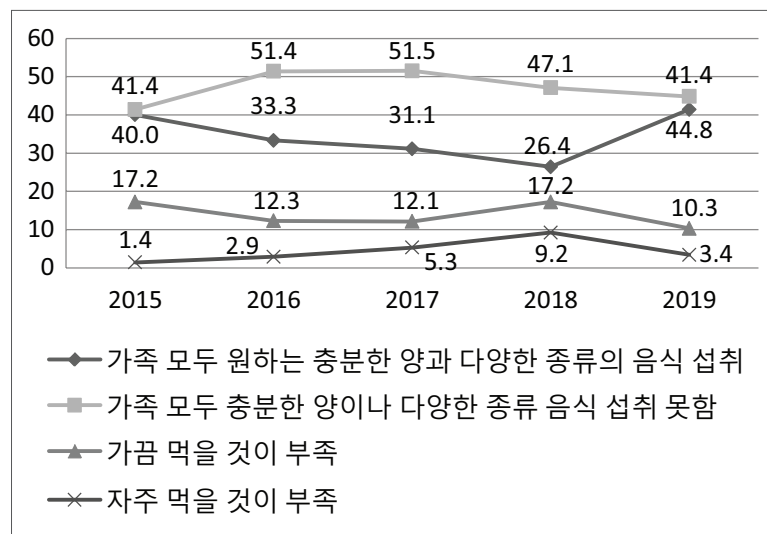
위에서 세부항목별로 살펴본 식생활은 장기적으로는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식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실태 평가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다시 크게 회복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4>를 보면 “가족 모두 원하는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었다”는 응답률은 2015년 40.0%, 2016년 33.3%, 2017년 31.1%, 2018년 26.4%, 2019년 41.4%로 지난 5년 동안 U자 형태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응답률은 2015년 1.4%, 2016년 2.9%, 2017년 5.3%, 2018년 9.2%로 계속 상승하다가 2019년 3.4%로 급락하였다.

5\_WFP, UNICEF and WH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March 2013, p.58.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수소탄)과 같은 해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화성-15형’ 발사에 대해 북한의 수출입을 제약하는 광범위한 대북 제재조치가 취해진 시기가 2018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북한의 2018년 주민생활 실태를 측정하고 있는 2019년 조사에서 북한주민의 식생활이 전년대비 크게 개선되었다는 결과는 흥미롭다.

〈그림 2-4〉 식생활 종합 실태 연도별 추이

(단위: %)



## 2) 의생활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 Bourdieu)의 용어를 빌리자면 의복은 사회적 지위를 구별짓는 상징체계의 하나이다. 북한사회에서 시

장의 확대와 사회계층화가 진행되면서 의복은 북한 주민에게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물이 되었다. ‘먹는 문제’ 다음으로 입고 쓰는 소비품은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주요 관심 대상으로 다뤄져오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첫 신년사에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공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일 것일 주문했다. 한마디로 일상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사는데 필요한 소비품의 국산화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김정은 정권 내내 유지되고 있다. 북한사회는 2015년에 일상 소비품 생산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맞는다. 휴대전화 단말기, 화장품, 샘물(생수), 신발, 피복 등 다양한 공산품들의 생산이 급증하면서 소비가 촉진되었다. 본 조사는 옷 구입 빈도, 옷 구입처, 옷 원산지의 세 가지 항목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의생활 실태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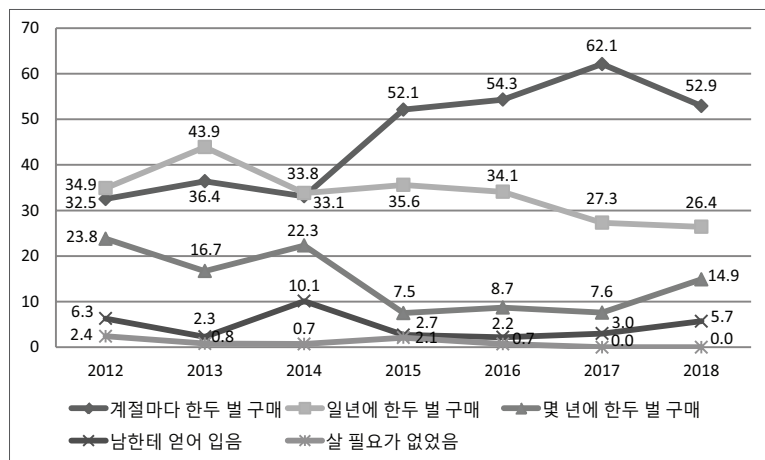
### (1) 옷 구입 빈도

〈그림 2-5〉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조사 결과로 “계절마다 한두 벌 구매” 응답이 2015년을 기점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2018년만 예외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19년에는 56.0%(〈그림 2-6〉 참고)로 다시 상승하였다. 2019년 조사에서는 응답의 선택지 표현을 조정하는 관계로 〈그림 2-5〉에는 2019년의 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고, 〈그림 2-6〉을 통해 조사 결과를 별도로 제시했다. 응답의 선택지에 “한달에 한두 벌 또는 더 자주 구입”을 포함시켰고, 기존 조사에 포함되어 있었던 선택지들 중에서 “남한테 얻어 입음”과 “살 필요가 없었음” 문항은 삭제하였다.

응답의 선택지가 변경된 2019년 조사 결과, “계절마다 한두 벌 구매” 응답이 56.0%, “한달에 한두 벌 또는 더 자주 구입” 응답이 18.1%로 조사돼 기존 조사에 비해 북한주민의 옷 구입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달에 한두 벌 또는 더 자주 구입” 응답과 “계절마다 한두 벌 구매” 응답을 합하면 74.1%로 김정은 정권 출범 초기인 2013년과 비교해 2019년 북한 주민의 의생활 형편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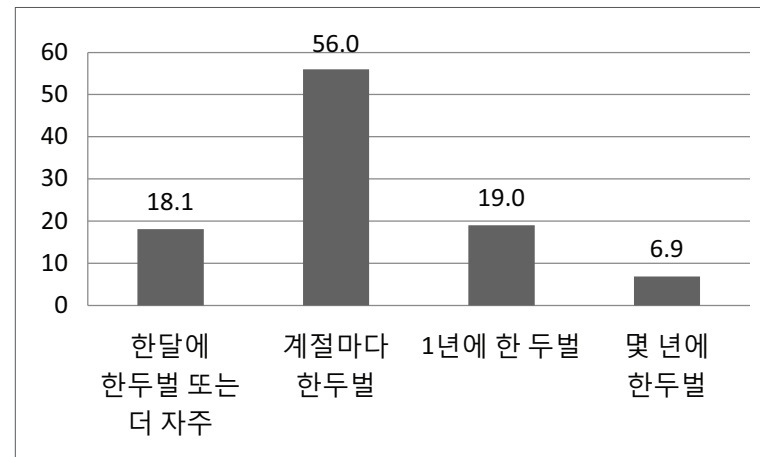
〈그림 2-5〉 옷 구입 빈도 연도별 추이(2012-2018년)

(단위: %)



〈그림 2-6〉 옷 구입 빈도(2019년)

(단위: %)



## (2) 옷 구입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자생적으로 발생, 확대된 시장(장마당)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전국 규모로 진화했다. 북한의 시장화 역사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시장의 다원화이다. 시장의 다원화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 종류의 다양성 증대 뿐만 아니라 공간적 차원에서 시장이 다양해지고, 나아가 시장을 주도하는 주체가 다양해지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과거에는 시장을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했다면, 2003년 북한 당국이 시장의 공식화를 선언한 이후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현재 북한의 유통시장에서 국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 상설시장의 매대에 대한 관리와 세금 징수 등을 비롯하여 대형 쇼핑몰에 해당되는 광복지구상업중심, 백화점, 외화상점, 황금별상점 등 여러 형태의



유통시장이 국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유통시장의 진화에 따라 북한 주민이 옷을 구입하는 곳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본 조사에 포함된 옷 구입처 응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표 2-1>을 보면, 옷 구입처로 시장(장마당)이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2018년의 평균응답률을 보면, 시장(장마당)이 9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영상점, 직매점, 백화점, 외화상점 등의 비중은 1% 안팎에 불과하다. 2015년 조사부터 백화점과 외화상점의 응답률이 비록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3% 안팎의 비중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는 점에 눈길을 끈다.

2019년 조사에서는 옷 구입처의 응답 선택지를 일부 조정하였다. 국영상점과 직매점을 통합하였고, 7년 동안 거의 응답이 없었던 외국에서 직접 구입, 국가선물 또는 무상배급 등은 모두 삭제하였다. 그 결과 <그림 2-7>에서 나타나듯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시장(장마당)의 응답률은 88.8%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7년간의 조사에서 나타난 평균 응답률 대비 낮다. 주목할 부분은 국영상점 및 직매점의 응답률과 백화점 및 외화상점의 응답률로 각각 3.4%, 6.9%로 나타났다는데, 이 수치는 지난 7년간 조사의 평균 응답률이 0.6%(국영상점 0.3% + 직매점 0.3%)와 1.2%인 점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옷 구입처의 다변화는 북한 당국이 역점을 두고 있는 소비품의 국산화 정책과 함께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빈부격차에 따른 소비의 계층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여년 동안 진행된 시장화를 통해 개인 간, 가구 간 소득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소득의 격차는 사회 계층화를 촉진하였으며 소비 영역에서도 중저가의 대중 시장과 고가의 고

급 시장 또는 수입품 시장으로 양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변화는 본 조사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옷 구입처 중 중저가 상품이 주로 유통되는 시장(장마당) 외에도 고가의 고급 상품이 주로 취급되는 백화점 및 외화상점의 비중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된 상황에서도 고소득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백화점 및 외화상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경제제재의 실효성에 도전적인 결과이다.

이밖에도 2019년 조사에서 나타난 국영상점 및 직매점의 응답률이 3.4%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7년 동안에 나타났던 평균 응답률 0.6%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진전이다. 국영상점 및 직매점 등은 대부분 국산품을 취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김정은 정권에서 주력하고 있는 경공업품의 국산화 정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으며 그 성과가 유통시장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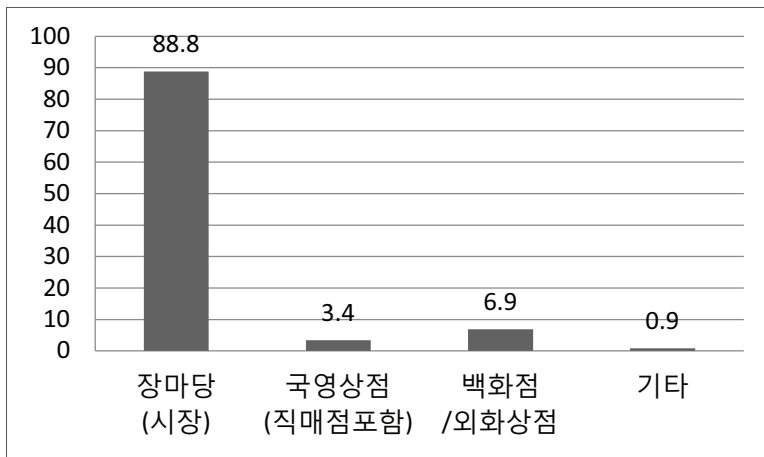
<표 2-1> 옷 구입처의 연도별 추이(2012-2018년)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 응답률
시장(장마당)	89.0	95.5	90.6	89.0	91.3	86.3	90.8	90.4
국영상점	0.8	0.8	0.0	0.0	0.0	0.8	0.0	0.3
직매점	0.0	0.0	0.7	0.0	0.0	0.0	1.1	0.3
백화점, 외화상점	0.8	0.0	0.0	3.4	1.4	3.0	0.0	1.2
외국에서 직접 구입	0.0	0.0	0.7	0.0	0.0	0.0	0.0	0.1
국가선물 또는 무상배급	0.0	0.0	0.7	0.0	0.0	0.0	0.0	0.1
무응답/오류	3.1	0.0	4.0	1.4	0.7	2.3	4.6	2.3
합계(N, %)	127 (100.0)	132 (100.0)	149 (100.0)	146 (100.0)	138 (100.0)	132 (100.0)	87 (100.0)	

〈그림 2-7〉 옷 구입처(2019년)

(단위: %)



### (3) 옷 원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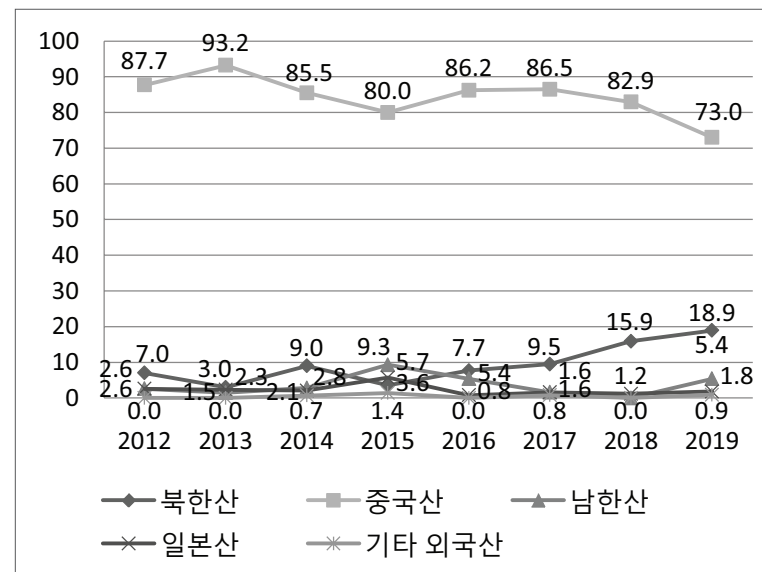
다음으로 의생활에서 살펴볼 부분은 구입한 옷의 원산지에 대한 것이다. 〈그림 2-8〉에 나타나듯 전체 비중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2013년 조사에서는 중국산의 비중이 93.2%로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부터 서서히 중국산의 비중은 하락세를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6년과 2017년에 잠시 소폭 증가하는 듯 했지만 2018년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중국산의 비중이 73.0%까지 떨어졌다. 중국산 비중이 가장 높았던 2013년과 비교했을 때 2019년에는 20.2%p가 낮아졌다. 이 변화는 북한 당국이 경공업품에 대한 국산화정책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의생활에서 나타난 변화가 북한 경제에 관한 한국은행의 추정 결과와는 대조적인 결과라는

점에서 면밀한 관찰과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이 2019년 7월에 발표한 ‘201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의하면, 경공업은 섬유, 의복, 가죽 및 신발 등의 생산이 줄어 전년대비 2.6%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북한산 의류의 비중이 전년대비 3%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북한산 의류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이전 년도에서는 생산이 증가했고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 소비한 북한산 의류의 비중이 증가한 이유가 해당 연도의 의류 생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만은 없다.

〈그림 2-8〉 옷 원산지 연도별 추이

(단위: %)



### 3) 주생활

북한에서는 주택을 ‘살림집’이라고 부른다. 2009년 1월 21일에 최고 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살림집법’은 2014년까지 4번의 ‘수정보충’을 거쳤다.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번의 법률적 개정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것은 지난 시기 살림집이 북한 사회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살림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림집은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 살림집, 협동단체소유 살림집, 개인소유살림집으로 구분된다. 살림집법 제3조는 국가 부담에 의한 살림집보장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실은 이와 같은 제도와 상당히 유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살림집을 “국가가 책임지고 원만히 해결해주는” 경우보다는 대체로 북한주민들은 본인들의 능력으로 살림집을 마련하고 있다. 살림집법 제28조는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살림집들이 ‘돈’과 ‘권력’에 의해 분배된다.

개인들 간에 살림집 거래가 완전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살림집법 제35조에서는 “공민은 필요에 따라 살림집을 교환하려 할 경우 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43조에서는 “국가소유살림집을 팔고 사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공민에게 빌려주거나 거간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살림집은 돈을 주고 사고 팔린다.

흥미로운 것은 법적으로 북한의 살림집은 ‘임대’ 주택에 해당된다. 살림집법 제42조에서 “살림집을 리용하는 공민은 정해진 사용료를 제때에 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어떤 소유형태의 살림집에서 살든 모든 주민들은 살림집 사용료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북한주민의 주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살림집 유형, 살림집 장만방법, 살림집 내 내구재 실태를 조사하였다.

#### (1) 살림집 유형

2006년 프랑스 칸 영화제에 초청되어 주목을 받았던 북한 영화 ‘한 여학생의 일기’에서 아파트는 중요한 영화의 모티브로 등장한다. 북한에서 아파트는 성공한 인생의 상징처럼 인식된다. 북한 중앙통계국과 유엔 인구기금(UNFPA)이 공동으로 현지조사하여 2015년에 발간한 보고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에 따르면 북한의 유형별 살림집 분포는 단독주택 32.8%, 연립주택 41.7%, 아파트 25.0%로 조사됐다.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 가운데 양강도 거주자의 비중이 75%인 점을 고려하여 유엔인구기금 조사 보고서에서 나타난 양강도의 살림집 유형별 분포를 보면 단독주택 18.8%, 연립주택 68.5%, 아파트 12.1%로 전체 평균 분포에 비해 연립주택의 비중이 훨씬 높고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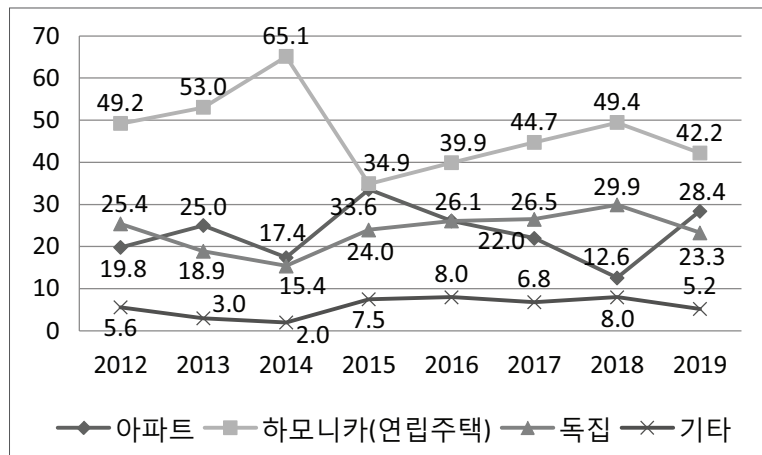
2019년에 실시된 본 조사에서는 <그림 2-8>에서 보이듯 아파트

<sup>6</sup>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and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 December 2015, p.12.

28.4%, 연립주택 42.2%, 단독주택 23.3%로 나타났다. 위의 유엔인구기금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양강도 지역의 유형별 살림집 분포와 비교했을 때 아파트의 비중은 16.3%p 높고, 연립주택은 26.3%p 낮으며, 단독주택은 4.5%p 높다. 이와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유엔인구기금이 조사한 시점은 2014년이고 본 조사가 측정한 시점은 2018년이기 때문에 4년이라는 시간적 경과가 있으며, 둘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조사의 응답자의 소득수준이 이전 조사 표본에 비해 상승하여 아파트와 단독주택 거주자의 표집이 더 많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소득수준과 살림집의 유형 간의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 저소득자의 경우는 연립주택 거주 비율이 높다.

〈그림 2-9〉 살림집 유형 연도별 추이

(단위: %)



## (2) 살림집 장만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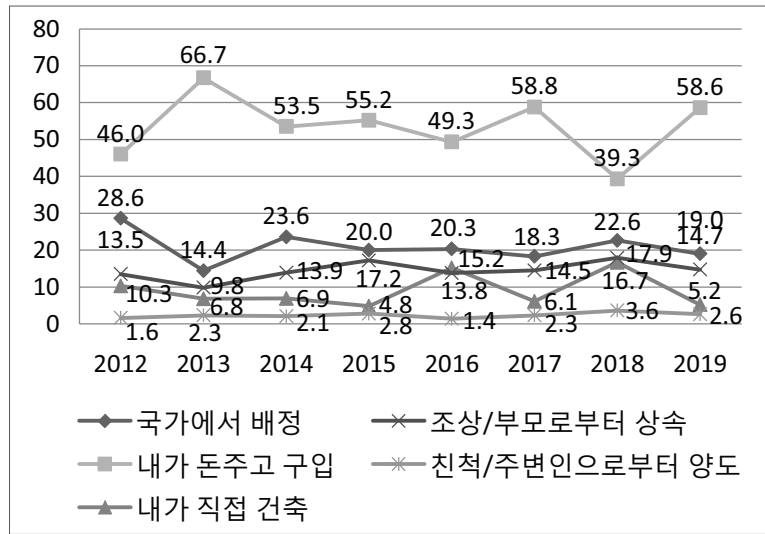
위에서 언급한 살림집법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살림집의 사적 매매가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북한에서는 살림집은 사실상(*de facto*)의 사유재와 같이 개인 간에 사고 팔렸다. 본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분명히 확인된다. 〈그림 2-9〉는 살림집을 장만하는 방법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비록 변동폭이 크지만 “내가 돈 주고 구입했다”는 응답 비율이 조사가 시작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일관되게 가장 높다. 특히, 2019년 조사에서는 본인이 돈주고 구입했다는 응답률이 58.6%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조상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았다는 비중도 평균 14.4%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반면에 “국가에서 배정받았다”는 응답은 2012년 28.6%에서 2019년 19%로 9.6%p가 감소했다. “직접 건축했다”는 응답은 2018년 16.7%에서 2019년 5.2%로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건축자재 수입이 위축되는 무역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살림집 장만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는 북한에서 살림집에 대한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를 잘 보여준다. 설령 국가에서 배정받은 살림집이라도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주민 개인 간에 돈을 주고 사고 팔리며 상속할 수 있는 개인 자산(*assets*)으로 기능하고 있다. 중국에서 개혁개방 초기에 주택 시장이 경제 활기를 이끌어 갔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개혁개방이 공식화되면 주택을 위시로 한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0〉 살림집 장만 방법 연도별 추이

(단위: %)



### (3) 내구재 보유 현황

2019년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살림집 내구재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살림집 내구재 지표들은 유니세프(UNICEF)가 2017년 북한의 중앙 통계국과 함께 조사하여 발표한 2017 DPR Korea MICS(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보고서에 포함된 가구 및 개인 자산(assets) 지표들을 참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TV, 냉장고, 냉동고, 전기밥솥, 세탁기, CD플레이어, 농경지, 가축, 손목시계, 자전거, 오토바이(스쿠터 포함), 달구지, 컴퓨터(태블릿 포함), 이동전화(휴대전화)가 포함되어 있다.<sup>7</sup> 반면 본 조사에서는 TV, 냉장고(냉동고 포함), 전기밥솥, 세탁기, CD플레이어, 유선전화(집전화), 이동전화(휴대전화)

7\_Central Bureau of Statistic, DPRK and UNICEF, 2017 DPR Korea MICS, June 2018, p.18.

화), 컴퓨터(노트북 포함), 자전거, 오토바이, 가축, 텃밭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 결과, 〈그림 2-11〉에서 나타나듯 TV와 CD플레이어와 같이 영상 매체를 다루는 기기는 각각 88.8%, 81.0%로 보유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반면에 냉장고(냉동고 포함)와 세탁기는 각각 31.0%와 18.1%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냉장고와 세탁기의 비중이 낮은 것은 북한주민의 구매력 수준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이 전자제품들은 안정적인 고(高)전력이 필요한 제품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 북한의 열악한 전력 실태에 영향을 받아 보유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고전력이 필요한 전열기구인 전기밥솥의 경우는 보유율이 69%로 비교적 높은 편인데 이는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공급되는 국가 전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 보유율은 61.2%로 '2017년 북한 MICS' 보고서에서 발표된 전체 평균 보유율 66.4%보다는 낮지만 본 조사의 응답자의 재북시 거주 중 75%를 차지하고 있는 양강도의 보유율이 59.3%인 것을 고려했을 때 본 조사에서 이동전화 보유율이 조금 더 높게 조사됐다.

그밖에 눈에 띄는 항목은 이동수단으로서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보유율이다. 본 조사에서는 각각 52.6%와 23.3%로 나타났는데 MICS 보고서에서는 동일 항목의 보유율이 83.1%와 5.2%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였다. 자전거의 보유율은 크게 줄었고 오토바이의 보유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오토바이의 경우 개인 소유가 제한받는 품목으로 대체로 개인이 구입하더라도 기관이나 단체에 등록하여야만 보유할 수 있으며, 개인 소유를 숨기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조사에서 측정된 23.3%는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사회변동적 측면에서 개별 가

구가 자전거가 아닌 엔진이 달린 이동수단인 오토바이의 보유는 이동 속도의 엄청난 발전이며, 물류 유통 차원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별 가구의 오토바이 보유율의 증가가 향후 북한의 잠재적 경제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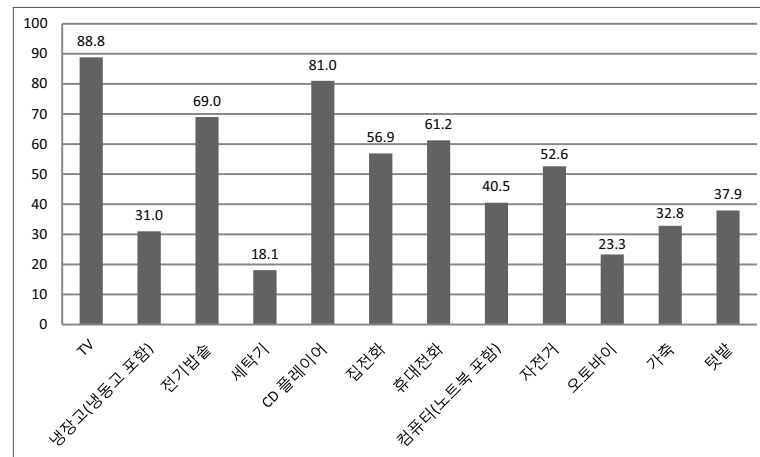
컴퓨터의 보유율 또한 2017년 북한 MICS 보고서에서는 18.7%로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에, 본 조사에서는 40.5%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앞서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역시 개별 가구가 보유하기 위해서는 당국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는 비공식적으로 보유하거나 보유를 은폐하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과 공동조사한 MICS에서 비해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본 조사에서 컴퓨터의 보유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의 전력 사정은 매우 부족하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은 저소득 저개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구의 전기·전자제품의 보유율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북한 사회에 보편화되어 있는 자가 태양광 발전체계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북한 당국이 공식 보도매체를 통해 발표한 것처럼 북한에서 태양광 에너지의 이용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1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2019년에 늘어난 수만kw의 발전능력에서 태양광 발전이 86%를 차지하였다.<sup>8</sup> 전국적으로 자가 부담으로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고 축전지와 변압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사용하는 가구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자가 전력생산체계가 구축되면서 북한 주민의 가구별 내구재 보유율도 향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8\_ "다양한 에너지를 위한 개발리용", <조선중앙통신> (2019년 11월 11일).

<그림 2-11> 가구(家口) 내 내구재 보유 현황(2019년)

(단위: %)



<표 2-2> 살림집 내구재 보유 현황에 대한 IPUS의 조사와 MICS 조사 비교\*

(단위: %)

구분	IPUS 조사(2019)	MICS(2018)
TV	88.8	98.2
냉장고	31	30.3
전기밥솥	69	62.6
세탁기	18.1	15.5
CD플레이어	81	75.5
땀발	37.9	53.7
가축	32.8	53.9
자전거	52.6	83.1
오토바이	23.3	5.2
컴퓨터	40.5	18.7
집전화(유선)	56.9	미포함
이동전화	61.2	66.4

\* IPUS조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19년에 조사한 것으로 2018년의 북한 상황을 측정하였으며, MICS는 유니세프와 북한 중앙통계국이 2017년에 공동 조사하여 2018년에 발표한 자료로 두 조사의 측정 시점에서 1년간의 차이가 발생함.

#### 4) 가계경제 생활

##### (1) 가계 지출구조

북한주민의 가계경제를 살펴보기 위해 가구별 월소득의 지출 내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그림 2-12>과 같이 월소득 중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이다. 2015년부터 2019년 조사까지 5년 동안 내내 식비의 비중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5년 동안 식비의 평균 응답률은 42.9%이다. 남한의 경우 2018년 가계동향조사에서 파악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의 비중은 14.4%로 북한의 1/3 수준에 불과하다.<sup>9</sup> 북한 가계지출에서 식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소득 저개발 국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다음으로 지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의류비로, 5년 동안 평균 응답률이 19.7%이다. 남한의 경우 2018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에서 의류 및 신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6.0%로 북한이 남한보다 의류비 지출이 3배 이상 높다. 앞서 살펴본 의생활에서 북한주민의 경우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계절마다 한두 벌의 옷을 구입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서 월평균 의류비의 지출 비중이 큰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에 비해 의류 및 신발을 더 자주 구입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높은 물가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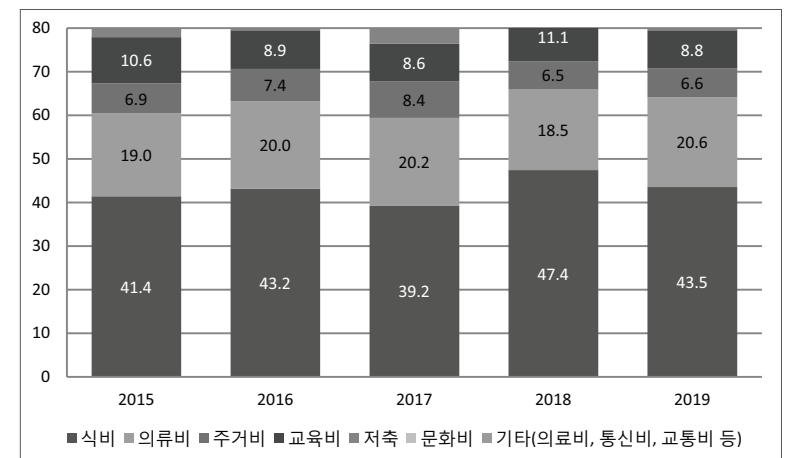
남한의 경우 주거비가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에서 11.2%를 차지하는 반면에 북한의 경우는 6%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주거비용

9\_통계청, "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2019.4.25.)

에 대한 부담이 아직은 남한처럼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밖에 북한의 경우 교육비가 2019년 조사에서 8.8%로 나타났는데 사교육 열풍이 심한 남한의 경우 교육비가 6.8%인 점을 감안했을 때 나타나 무상교육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북한에서 가계의 교육비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 점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후술하겠지만, 북한에서도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상교육 제도는 형해화되어 공교육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림 2-12> 월소득의 지출구조 연도별 추이

(단위: %)



##### (2) 남한상품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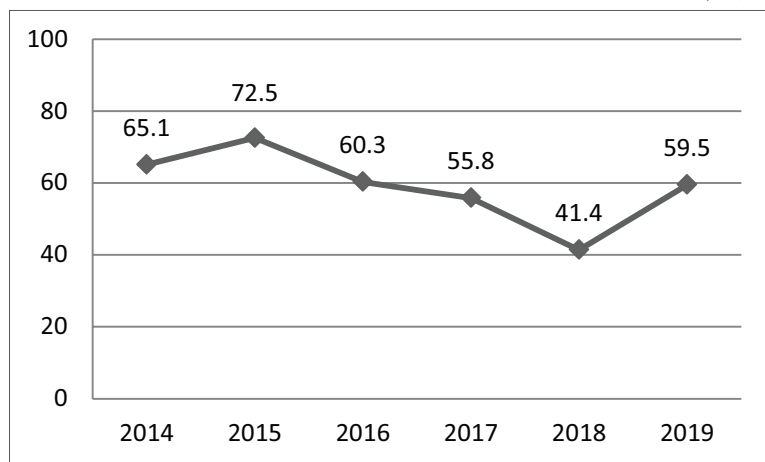
북한의 시장은 이미 국제화되어 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들 중 중국산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남한산과 일본산 상품들도 흔하게 사고 팔린다. 특히, 남한산 상품은 정치적 적대관계로 인해 유통이 금지

되어 있지만 북한주민들 사이에 남한상품의 선호도는 높다. 남한상품이 질적으로 우수하기도 하지만 남한의 문화콘텐츠, 소위 한류의 영향으로 북한주민들의 남한상품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림 2-13〉은 남한 상품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15년에는 남한 상품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72.5%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2018년까지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2018년에는 남북관계가 다시 해빙기를 맞으면서 4월과 9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재개되었다. 2019년 조사는 이와 같이 변화한 남북관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 2019년 조사에서는 남한 상품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59.5%로 비록 2015년의 최고 수준만큼은 회복하지 못했지만 전년대비 18.1%p 급등하여 남북관계 변화가 북한주민의 남한상품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3〉 남한 상품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



### (3) 사교육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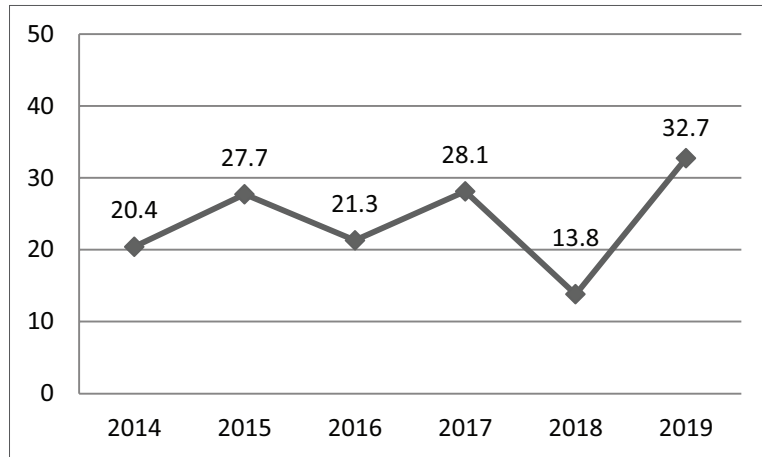
북한에서는 12년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경제 위기는 공교육의 약화를 초래했고,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북한에서 시장화는 교육 영역에까지 확장되어 사교육 시장까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중산층과 신흥 부유층은 계층 상승과 출세를 위해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궁핍한 교원과 교수들은 생계 활로로 사교육의 공급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북한사회에서 사교육의 확대는 한편으로는 교육 불평등의 확대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상교육의 무기력을 의미한다.

〈그림 2-14〉에서 나타나듯 2014년부터 2019년 조사 기간 동안 사교육 경험 응답률은 불안정하게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8년에는 13.8%로 최저점을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32.7%로 급상승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2018년에는 예년과 달리 표본수가 크게 부족하고 저소득층이 과대 표집된 점을 고려했을 때 2018년의 수치는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8년 조사 결과를 제외하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반적으로 사교육의 경험률은 증가 추세를 보여준다. 조사를 시작한 2014년에 20.4%에서 5년이 경과한 2019년에는 32.7%로 12.3%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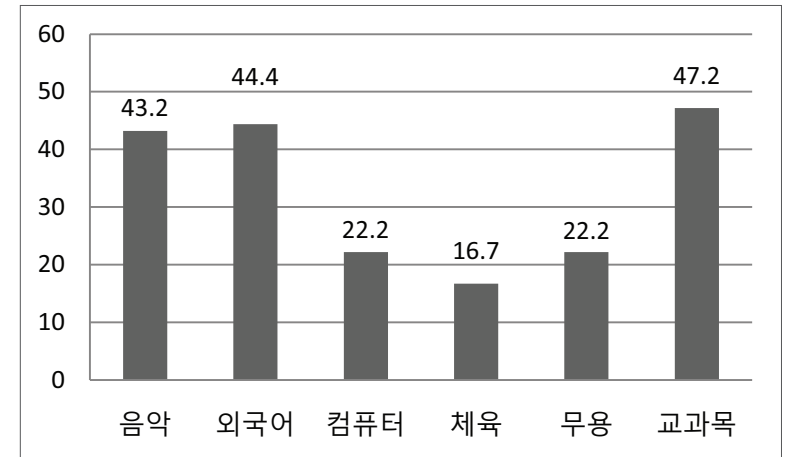
〈그림 2-14〉 자녀 사교육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



〈그림 2-15〉 개인강습 분야별 경험(2019년)

(단위: %)



〈그림 2-15〉는 자녀의 사교육을 경험한 응답자들 가운데 사교육의 분야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가장 높은 응답률은 보인 항목은 ‘교과목’(42.7%)로 나타나 내신 성적 관리차원에서 사교육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4년 조사에서 20.0%였던 것과 비교해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비중이 늘어났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외국어’(44.4%)로 김정은 정권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는 정책 환경에서 외국어에 대한 사교육 수요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014년 조사에서 13.3%였던 것과 비교해 3배 이상 응답률이 높아졌다.

세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음악’(43.2%)은 2014년 조사에서 46.7%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약간 하락하였다. ‘컴퓨터’의 응답률은 2019년 조사에서 22.2%로 나타났는데 2014년 조사에서 3.3%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사이에 약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김정은 정권에서 정보화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 (4) 가족 내 의사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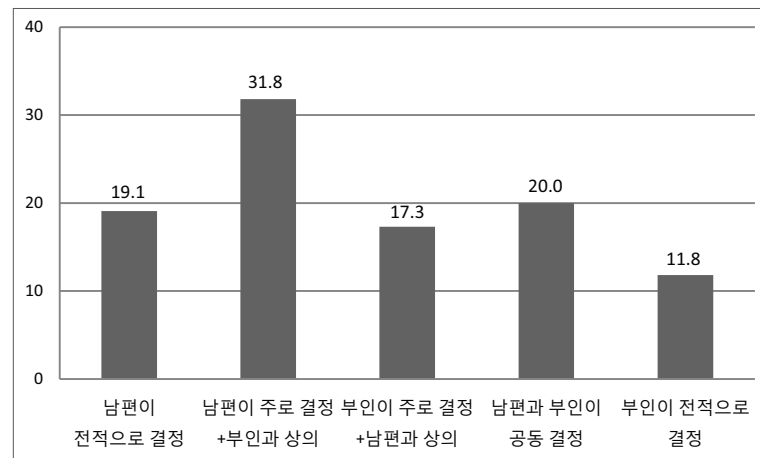
북한은 국가(최고지도자)와 사회(인민)가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연결된다. 최고지도자인 수령은 ‘아버이’로 호칭되고 인민을 인덕정치로 보살피며, 그 대가로 인민은 수령(아버이)에게 충과 효로 보답하는 가족주의적 국가체제를 지향한다. 이와 같은 가부장적인 국가체제는 사회의 가장 말단 조직인 가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가족은 남자 세대주 중심의 강한 가부장적 성격을 지닌다. 배급제는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물질 토대였다. 1990년대 발생한 경제적 대위기를 일컫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배급제가 붕괴하자 가부장적 가족제도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여성이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생계의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여성의 가족 내 지위도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림 2-16〉은 가족 안에서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준다. 2019년 조사에서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은 19.1%로 이 설문문항이 처음으로 포함된 2015년 조사에서는 29.7%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10.6%p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꼭 가족 내 남편의 지위 하락과 반대로 여성의 지위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은 2015년에 22.5%였으나 2019년에는 11.8%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한 “남편과 여성이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응답 역시 2015년 28.6%에서 2019년 20.0%로 감소했다. 반면에 “부인과 상의하되 남편이 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2019년에 31.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2015년에 19.6%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이상의 결과는 북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소득 증가가 꼭 가족 내 지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을 말해준다. 나아가 경제사회의 변화가 기존의 강한 가부장적인 국가체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16〉 가족 내 의사결정 구조(2019년)

(단위: %)



### 3. 정보화 실태

2000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3대 기둥의 하나로 과학기술중시가 거론된 이후 김정일 정권에 이어 김정은 정권에서도 과학기술 중시 정책은 계승되었고, 특히 ‘지식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보화가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2019년 8월 헌법에는 경제발전의 지향점이 기존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서 ‘정보화’가 추가되어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제26조)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당국이 정보화를 경제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과학기술전당 건립,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운동 전개, 원격교육대학 운영, 기업소·공장·농장 내 과학기술보급실 설치 등 김정은 정권에서 다양한 정보화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정보화 수준은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은 2019년 국제인터넷프로그램대회인 '코드쉐프'에서 3차례 1등을 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sup>10</sup> '평양', '아리랑', '진달래', '푸른하늘'과 같은 다양한 브랜드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생산되어 북한주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만방'이라는 IPTV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고, 와이파이(Wi-Fi)가 상용화되었다.

주민들은 휴대전화로 일상적인 소통은 물론 음식이나 물건을 주문하고 있으며, 수십 개의 온라인상점이 개설되어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정보화는 북한의 경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습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물론 북한당국이 선전하고 있는 정보화의 성과는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하면 북한의 정보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저발전 수준일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의 봉쇄는 북한의 정보화의 확대 발전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 (1) 휴대전화

2019년 조사에서 북한에서 휴대전화를 보유했다는 응답률은 62.9%로 나타났다. 2015년 조사에서는 휴대전화 보유율이 아닌 이용률(55.5%)

10\_ "2019년 실력으로 빛내인 청년학생들", <조선중앙통신>(2019년 12월 19일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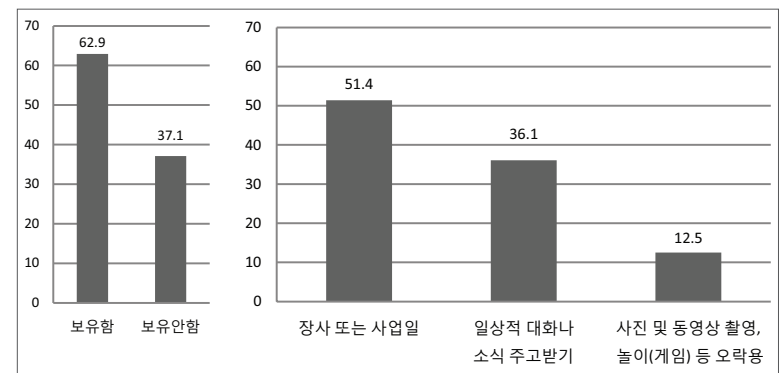
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5년 사이에 증가한 것은 분명하다. 현재 북한산 휴대전화 단말기 생산과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조사에서도 휴대전화 보유 응답률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주민의 휴대전화 사용 용도는 <그림 2-17>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장사 또는 사업일'이라는 응답이 51.4%로 가장 높다. 물건을 주문하고 받는데 그리고 물가나 환율의 시세를 파악하는데 휴대전화가 용이하게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사용 용도는 '일상적인 대화나 소식 주고받기'(36.1%)이다. 이 응답결과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증대와 네트워크 확대에 휴대전화가 주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연령대별 휴대전화 사용 용도에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장사 또는 사업일' 용도 응답률이 높은 반면, 젊은 층은 일상적 커뮤니케이션과 오락 용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7> 휴대전화 보유율과 용도(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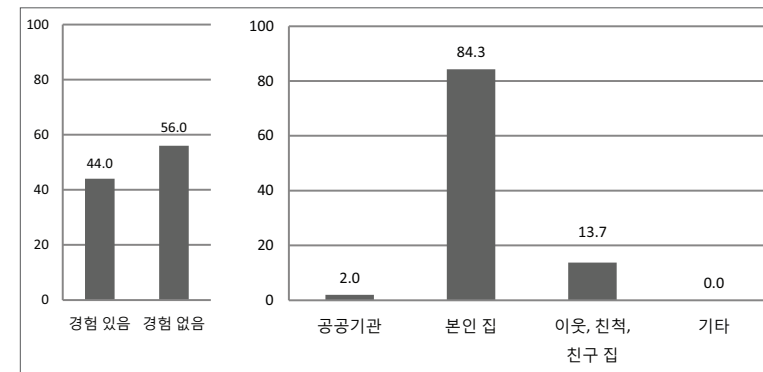
## (2) 컴퓨터

정보화의 두 번째 지표인 컴퓨터의 이용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림 2-18>에서 보이듯 컴퓨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44.0%로 나타났다. 2015년 조사에서 컴퓨터의 이용 경험 응답률이 27.4%였던 것과 비교해 5년 사이에 16.6%p 증가하였다. 컴퓨터 이용 경험 응답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정책의 효과가 사회의 기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연령대별 컴퓨터 이용 경험 응답을 비교해 보면 세대간 정보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 컴퓨터 이용 경험 응답률은 20대 44.9%, 30대 26.5%, 40대 24.5%, 50대 4.1%, 60대 이상 0.0%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컴퓨터 이용 경험이 비율이 높은 반면 50대 이상의 연령집단에서는 급격히 낮아져 60대 이상의 응답자 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애주기에서 정보화 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른 차이로 발생한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야 공교육에서 실질적으로 정보기술 교육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림 2-18> 컴퓨터 이용 경험과 이용 장소(2019년)

(단위: %)



## (3) 인터넷

마지막으로 살펴볼 정보화 지표는 네트워크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인터넷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대내적으로는 ‘광명’으로 불리는 국가망을 통해 전국의 주요 공공기관 및 기업소, 개별 가구 등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보화 성과에 대한 북한당국의 선전 내용과 달리 경험 조사를 통해 파악된 일상적 정보화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2018년에 발표된 북한의 MICS 보고서에 의하면 집에서 인터넷을 접속했다는 가구의 응답률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본 조사를 통해 나타난 북한주민의 인터넷 이용 경험은 MICS 결과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그림 2-19>에서 보이듯 2019년 조사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9%로 나타났다.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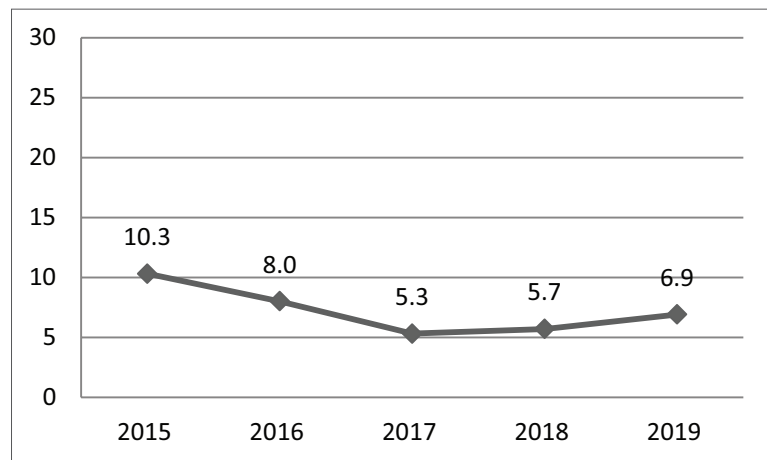
11\_Central Bureau of Statistic, DPRK and UNICEF, 2017 DPR Korea MICS, June 2018, p.31.

지만 2015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또한 인터넷 이용 장소는 대부분 공공기관으로 응답돼 평양이 아닌 지역에서 개별 가구에서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MICS 결과와 비교했을 때 본 조사를 통해 파악된 북한주민의 인터넷 이용 경험 수준은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북한 주민의 일상적인 정보 접근은 상당한 제약되어 있으며,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의 정보 인프라 구축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정보화는 평양 및 대도시, 정부기관과 교육 및 연구기관, 특정 산업 부문 등을 중심으로 불균등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림 2-19〉 인터넷 이용 경험 연도별 추이

(단위: %)



## 4. 계층별 주민생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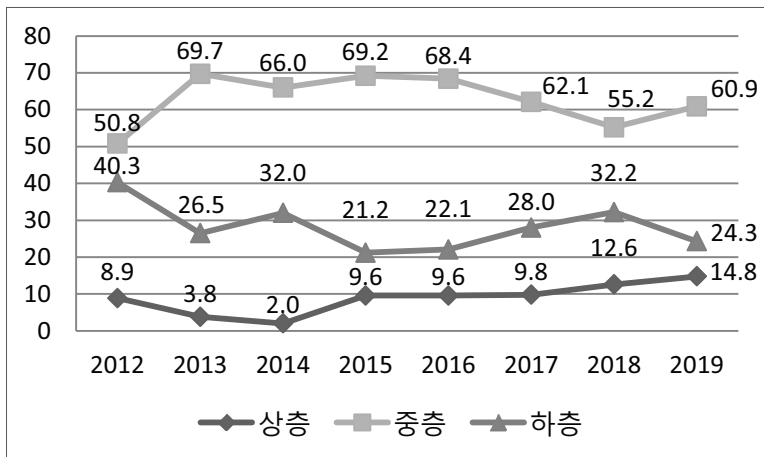
### 1) 계층의 구성과 특징

과거 국가의 공공배급제도는 아주 소수의 특권집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의 삶을 균질화 또는 평균화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20년 이상 진행된 시장화는 북한사회를 빠르게 계층화시켰다. 소득의 격차는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인 의식주 생활에서의 차등을 야기하였고, 계층 간 소비 패턴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림 2-20〉은 2012년-2019년 조사 기간에 응답자들이 탈북 직전에 자신의 계층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응답한 결과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계층은 중층으로 2013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7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9년에 다시 반등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9년간의 조사 기간에서 나타난 중층의 평균 비중은 62.8%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반면, 상층의 평균 비중은 8.9%, 하층의 평균 비중은 35.8%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실제로 북한사회의 계층 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중층은 과대 표집되었고 하층은 과소 표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본 조사에서 나타난 주관적 계층 의식의 분포는 조사 표본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조사 표본이 주로 접경지역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높은 '탈북 비용'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에 있는 북한주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림 2-20〉 주관적 계층의식 연도별 추이

(단위: %)



## 2) 계층별 생활 비교

〈표 2-3〉을 보면, ‘가족 모두 원하는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 섭취’의 응답은 상층 64.7%, 중층 47.1%, 하층 14.3%로 매우 뚜렷한 격차를 보인다. 반대로 ‘가끔 먹을 것이 부족’과 ‘자주 먹을 것이 부족’의 응답은 상층의 경우 한 명도 없었던 반면, 하층의 경우는 39.3%로 10명 중 3명이 먹을 것이 부족했다고 응답해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중층의 경우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응답이 7.1%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비교 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북한에서는 중층 정도에 속하면 먹는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3〉 계층별 식생활 비교(2019년)

(단위: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가족 모두 원하는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 섭취	64.7	47.1	14.3
가족 모두 충분한 양이나 다양한 종류 음식 섭취 못함	35.3	45.7	46.4
가끔 먹을 것이 부족	0.0	7.1	25.0
자주 먹을 것이 부족	0.0	0.0	14.3
전체(N, %)	17(100.0)	70(100.0)	28(100.0)

계층별 식생활 실태를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표 2-4〉에서 나타나듯 주식의 곡물 배율에서 계층 간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주식을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는 응답은 상층 88.2%, 중층 75.7%, 하층 39.3%로 상층과 중층 간의 격차보다 중층과 하층간의 격차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주식을 ‘강냉이 위주로’ 또는 ‘거의 강냉이로만’ 먹었다는 응답은 상층 5.9%, 중층 10.0%, 하층 32.2%로 계층 간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식생활 측면에서 상층과 중층 간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하층은 식생활에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표 2-4〉 계층별 주식 곡물 배율 비교(2019년)

(단위: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거의 입쌀로만 먹음	88.2	75.7	39.3
입쌀 위주로 강냉이 섞어 먹음	0.0	7.1	17.9
입쌀과 강냉이를 반반 섞어 먹음	5.9	7.1	10.7
강냉이 위주로 입쌀 섞어 먹음	5.9	5.7	17.9
거의 강냉이로만 먹음	0.0	4.3	14.3
전체(N, %)	17(100.0)	70(100.0)	28(100.0)

영유아의 발육과 영양 상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대해 계층별 비교를 해보면, <표2-5>에서 보이듯 고기를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먹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층 70.6%, 중층 50.5%, 하층 35.7%로 나타났다. 고기 섭취의 경우 상층과 중층 간의 격차가 주식의 곡물 배율에서 나타난 격차보다 더 크게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층의 경우 ‘일 년에 한두 번’ 고기를 먹었다는 응답이 한 명도 없는 것과 달리 하층의 경우 17.9%로 나타나 탄수화물에 비해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서 계층 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2-5> 계층별 고기 섭취 빈도(2019년)

(단위: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거의 매일 섭취	29.4	18.6	0.0
일주일에 한두 번 섭취	41.2	31.9	35.7
한 달에 한두 번 섭취	29.4	24.3	46.4
일 년에 한두 번 섭취	0.0	5.7	17.9
전체(N, %)	17(100.0)	70(100.0)	28(100.0)

다음으로 계층별 의생활을 비교해 보면 식생활에 비해 의생활에서는 상대적으로 계층 간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은 계층별 옷 구입 빈도를 비교한 결과로, ‘계절마다 한두 벌 정도 구입’ 응답이 상층 52.9%, 중층 58.6%, 하층 50.0%로 계층 간 격차가 크지 않다.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벌 정도 또는 더 자주 구입’ 응답에서는 상층 35.3%, 중층 20.0%, 하층 3.6%로 비교적 계층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 평균적인 수준을 벗어났을 때는 계층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계층별 의생활 비교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옷 구입처로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계층과 상관없이 절대 다수가 장마당 또는 시장에서 옷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백화점과 외화상점에서 옷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상층의 경우 17.6%의 응답률이 나타난 반면, 중층 7.1%, 하층 0.0%로 나타나 고급의류 구입은 대체로 상층에서만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6> 계층별 옷 구입 빈도(2019년)

(단위: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한 달에 한두 벌 정도 또는 더 자주 구입	29.4	18.6	0.0
계절마다 한두 벌 정도 구입	41.2	31.9	35.7
1년에 한두 벌 정도 구입	29.4	24.3	46.4
몇 년에 한두 벌 정도 구입	0.0	5.7	17.9
전체(N, %)	17(100.0)	70(100.0)	28(100.0)

<표 2-7>은 계층별 살림집 유형을 비교한 결과이다. 아파트의 경우 상층과 중층이 각각 35.3%, 32.9%로 별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하층의 경우는 14.3%로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연립주택의 경우 하층은 64.3%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상층은 29.4%, 중층은 35.7%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의 경우 상층과 중층이 각각 23.5%, 27.1%로 별 차이가 없으나 하층은 14.3%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상의 비교 결과는 상층과 중층의 경우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선호도가 높은 반면, 연립주택은 하층의 주거 형태임을 보여줌으로써 살림집이 북한에서 계층 지표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7〉 계층별 살림집 유형(2019년)

(단위: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아파트	35.3	32.9	14.3
연립주택	29.4	35.7	64.3
단독주택	23.5	27.1	14.3
기타	11.8	4.3	7.2
전체(N, %)	17(100.0)	70(100.0)	28(100.0)

마지막으로 계층별 가구 내 내구재 보유 현황을 비교해보면 〈표 2-8〉과 같다. TV와 CD플레이어와 같이 영상 관련 기기의 경우는 모든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매우 높은 보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내구재와 달리 상대적으로 계층 격차가 크지 않다. 자전거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계층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자전거가 개인의 이동수단으로 필수품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전기밥솥, 세탁기, 컴퓨터는 상층과 중층 간의 격차는 크지 않지만 하층의 보유율은 낮은 특징을 가진다. 냉장고와 오토바이는 고가의 제품으로 상대적으로 상층의 보유율이 높다. 가축과 텃밭의 경우 중층과 하층의 보유율이 높아 이것들이 중·하층 가구의 중요한 가계 수입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8〉 계층별 가구 내 내구재 보유 비교(2019년)

(단위: %)

구분	상층	중층	하층
TV	94.1	91.4	78.6
냉장고	58.8	32.9	10.7
전기밥솥	88.2	72.9	46.4
세탁기	29.4	20.0	7.1
CD플레이어	88.2	85.7	64.3
집전화	58.8	67.1	28.6
손전화	88.2	64.3	35.7
컴퓨터	58.8	44.3	21.4
자전거	64.7	52.9	42.9
오토바이	41.2	28.6	0.0
가축	29.4	34.3	32.1
텃밭	29.4	41.4	35.7
전체(N, %)	17(100.0)	70(100.0)	28(100.0)

## 5. 평가와 시사점

경제제재와 농업 생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북한 주민들에게 식생활 위기의 시그널은 발견되지 않는다. 본 조사가 측정하고 있는 2018년에는 곡물, 밀가루, 식료품 수입 증가와 시장 곡물가격 안정세 유지로 식생활에 큰 타격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조사에서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



하였지만 올해 북한 전역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내년 조사에서는 고기 섭취율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농업기구(FAO)의 최근 보고서 “Early Warning Action Report on Food Security and Agriculture”(Oct./Dec. 2019)에서는 가뭄과 이상 기후로 인한 곡물 생산 저조로 2019년 북한주민 1,100백만명(전체 인구의 40%)이 식량불안에 처할 수 있다고 예고해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김정은 정권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산화’ 정책의 성과가 본 조사에서도 일부분 확인되고 있다. 국산(북한산) 의류의 비중이 2015년에는 3.6%였으나 2019년에는 18.9%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18년에 남북관계의 개선 효과가 주민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남한 물건 사용 경험률이 2018년 41.4%에서 2019년 59.5%로 크게 증가하였다.

올해 조사에 처음 포함된 살림집 내 내구재 보유 현황을 통해 북한 가구(家口)의 보유 자산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저가의 자신 보유율이 높은 것과 달리 북한에서는 고가의 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나 북한주민의 소득 수준이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TV, CD플레이어, 이동전화, 자전거는 상당히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의 전기공급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高)전력이 필요한 가전제품의 보유율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대부분의 가구들이 태양광발전과 같은 자가발전체계를 자력으로 구축하고 있는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개인 이동 수단이 자전거

에서 오토바이로 전환되고 있는 것도 올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김정은 정권에서 주력하고 있는 과학기술 발전, 특히 정보화 정책(전민과학기술인재화, 교육혁신, 경제 현대화·정보화·과학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화 수준이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국산 단말기 양산체제가 갖춰진 이후 휴대전화 보유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컴퓨터의 보급과 이용 실태는 기대만큼 높지 않다. 특히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으로 원천 통제되고 있는 인터넷은 물론 국가가 주도적으로 구축한 인터넷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은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사회에서는 세대 간 정보격차가 매우 크고,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소도시, 공공과 민간, 계층 간 정보화가 매우 불평등하고 분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변화로 인한 문화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계층 간 생활격차는 물론 소비생활의 양태가 달라지고 있다. 아파트와 오토바이의 소유는 북한에서 신분 상승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체계이다. 사교육의 증가는 신분 상승의 욕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지표이다. 점점 북한사회에서도 계층 간 ‘구별짓기’와 같은 문화변이가 진행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에서 치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여명거리,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장, 양덕온천관광지구 등과 같은 건설들은 소비와 욕망을 부추긴다. 빈부격차, 사회 불평등, 만연한 부정부패는 향후 북한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  
시장화와  
경제적 자유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3장 시장화와 경제적 자유

| 강재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1. 서론

1980년대 말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한 북한사회의 시장화가 어언 30년을 가까이 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 시장화는 북한 경제는 물론 북한주민의 체질을 바꾸는 역동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냈고, 북핵문제로 인한 대북제재의 여파 속에서도 북한경제의 주요 활력소로 자리매김했다. 2000년대 초 국가경제의 2중구조화정책(전략부분 계획경제, 비전략부분 시장편입)에 따른 기업과 시장의 공생적 자기구조화가 양적·질적 경쟁의 가속화를 이끌어냈다.

2002년 「분조관리제」에서 2012년 「포전담당제」를 거치면서 협동농장 토지임대와 개인농업간의 공식·비공식거래에 대한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개인 운수업, 음식점, 식품가공업, 의류가공업, 등과 같은 사경제들은 이제 공식기업들과의 상호 교환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공식적인 시장들을 넓혀가고 있다.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의 도입으로 기업의 가격자유화가 현실화되면서 2018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지방 산업공장 및 사업소들이 시장 및 주민들의 생활인프라 속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필요에 따라 국영기업소의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장에 임시 고용하는 형태의 인력과견대행도 점차 합법화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의무적으로 동원되어야 했던 국가건설에 대리 인부(代理人夫)를 내보내는 일도 유행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 정권에서 시장의 자발적 다양성의 확대, 기업 자율성의 확대는 국산화정책과 맞물려 경쟁적 시장네트워크와 기업 간 경쟁력의 증가와 같은 질적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sup>12</sup> 질적 변화와 함께 시장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는 국가경제와 주민들의 경제활동 체질을 바꾸고 그에 따른 지역별, 직업별, 계층별 경제 분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14년 이후 지속적인 대북제재와 대외무역의 하락과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북한경제의 ‘효자손’이다. 북한경제의 시장의존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장의 확대와 다양성에 따른 합법과 불법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들에서 여전히 합법적이면서도 불법적인 물리적 통제기구들이 주민들의 시장경제활동이나 생존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변된다.

이러한 북한 시장의 동태가 북한당국의 경제정책과 대북제재, 지역 간·행위자 간 격차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장화로 인한 북한사회의 변동을 시장화의 사회경제적 효과, 그로 인한 경제적 계층분화, 시장의 연속성과 경제적 자유, 경제개혁과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우선 북한

12\_ “북 신의주화장품공장, 생산품 판매수익으로 배급 정상화,” 『자유아시아방송』, 2018. 4. 20.; “北 개인기업소 운영 활발… 평남선 월 100 달러 월급 주기도,” 『데일리NK』, 2018. 9. 12; “청진 개인기업소 운영 활발… 5톤 선박도 직접 건조,” 『데일리NK』, 2019. 1. 21.

이탈주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통해 자신들의 생활수준이 각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이 시장에서,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다. 이 과정에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서의 변화, 일상생활에서의 고민, 등을 시장화의 사회경제적 효과측면에서 살펴본다. 두 번째로, 북한주민들의 계층구조에 대한 객관적 인식, 도시별·도별·직업별 계층분화에 따른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계층분화에 따른 원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시장경제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을 검토한다. 세 번째로, 시장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와 제반조건, 나아가 북한의 경제개혁과 경제발전을 위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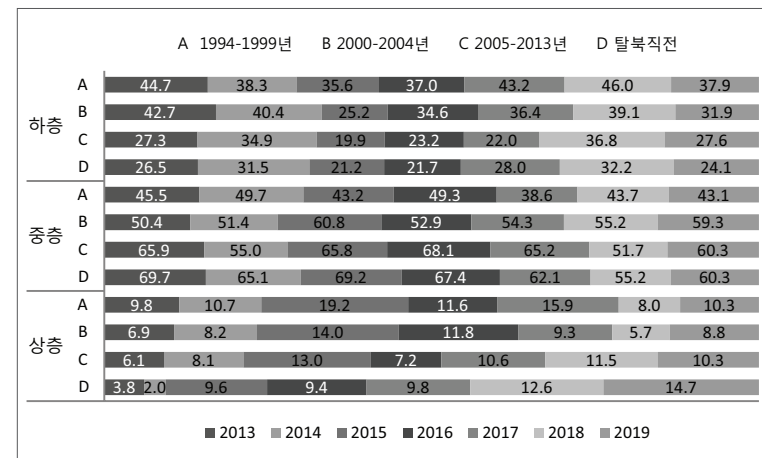
## 2. 시장화의 사회경제적 효과

### 1) 시기별 생활수준의 변화

이 조사결과는 설문자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결과로, 1990년대에서 2000년대를 거치면서 생활수준에서의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림 3-1>에서 보면 상층과 하층비율은 A에서 D로 갈수록 줄어들고, 중층비율은 증가세를 보인다. 이는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 이전, 또는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상층과 하층의 비율은 감소하고 중층은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다. 2012년 응답자들의 경우, 1990년대 상층비율은 9.8%였지만, 탈북직전에는 3.8%로 줄어들었다.

<그림 3-1> 북한 거주시 생활수준의 변화추이

(단위: %)



반대로 중층비율은 A(45.5%)에서 D(69.7%)로 가면서 14.2% 증가세를 보인다. 하층에서는 A(44.7%)에서 D(26.5%)로 가면서 22.2% 줄어든 결과를 나타낸다. 즉 상층과 하층이 감소하고 중층이 증가하는 추세는 2017년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2018년 이후에는 상층과 중층이 증가하고 하층은 여전히 감소세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의 속성이나 특성에 따른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A에서 D로 가면서 중층에서 상층으로 이전한 경우, 둘째, A에서 D로 가면서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전자와 후자 모두 시장화로 인한 신흥 상층 혹은 신흥부자의 출현으로 가능한 변수이거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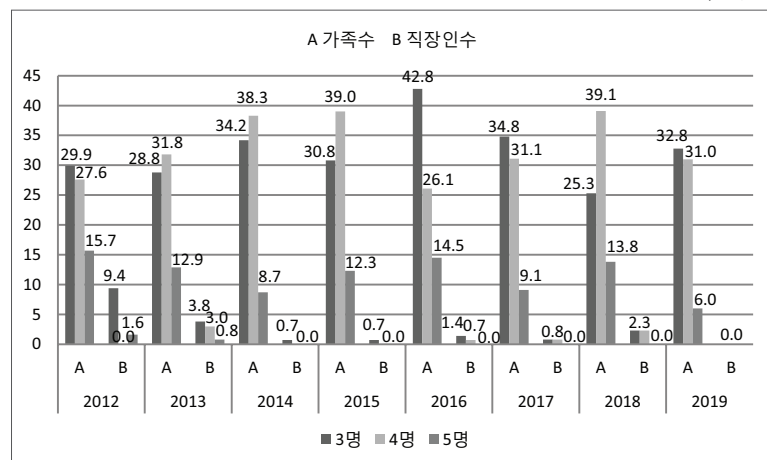
## 2) 수입과 지출에서의 변화

### (1) 직장 대 시장 경제활동 비교

북한주민들의 직장에서의 수입은 시장에서의 수입에 우선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1인 가족의 경우 약 70%이상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편이다. 2012년 조사에서는 3인 가족 응답자 29.9% 중 9.4%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명중 1명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가족 수 대 직장인의 수가 감소하면서 2018년까지 7년 동안 3인 가족 대 직장인 수는 평균 23.6명 대 1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3인, 4인, 5인 가족에서 모두 직장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평균 1인 가족에 비해 2인, 3인, 등 가족 수가 많을수록 직장인 수는 더 적은 편이다.

〈그림 3-2〉 북한 거주시 가족수 대 직장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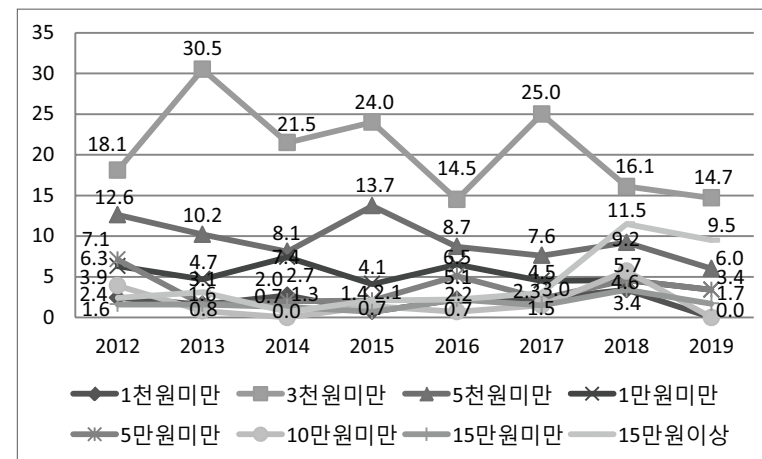
(단위: %)



〈그림 3-3〉에서 직장에서의 평균수입은 8년 연속 3,000원(북한원) 미만이라는 비율이 우세하다. 그 뒤로 5천원 미만이 따르지만, 2018년부터는 15만원 이상이라는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전년 대비 8.1% 상승한 11.5%를 나타냈다. 2019년에는 2.5% 감소한 9.5%를 나타냈지만, 15만원 이상이라는 비율이 높아진 것은 어느 정도 기업단위 자율경영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볼 수 있다.

〈그림 3-3〉 직장에서의 평균수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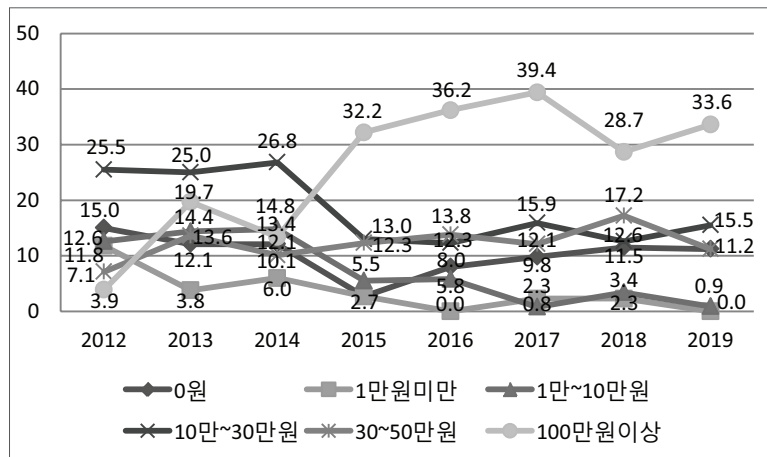


직장인들의 직장 외 부수입(장사수입)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리고 수입규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10만-30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이 2012년 25.5%에서 2015년에는 13%로 대폭 줄어들었다. 반대로 100만원(한화 약 13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2012년(3.9%)에 최하위에서 2014년(13.4%)을 끝으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즉 2015년에 32.2%로 10만-30만원 수입자들을 제치고 급상승했다.

2018년에 28.7%로 조금 낮아졌으나 2019년에는 다시 증가하면서 여전히 압도적인 비율을 보유하고 있다.

〈그림 3-4〉 직장 외 부수입(장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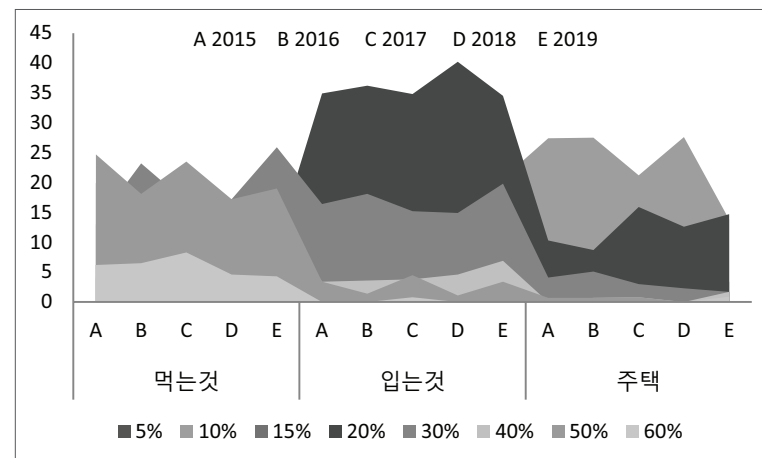
(2) 수입 대 지출정도 비교

북한주민들의 월평균지출정도에 대한 조사는 2015년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다. 월평균지출정도를 6가지(먹는 것, 입는 것, 주택, 자녀교육, 문화생활, 저축)측면에서 살펴보면, 입는 것에 20%를 지출한다는 응답자들이 5년 연속 35%이상을 차지한다. 이 경우 교육, 저축, 주택순으로 투자한다. 먹는 것에 50%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소규모지만, 저축, 문화생활, 입는 것, 자녀교육, 주택 순으로 지출한다. 주택에 10%를 하는 경우에는 입는 것과 문화생활에도 거의 동일하게 지출한다. 그리고 자녀교육, 저축 순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먹는 것에서는 50%를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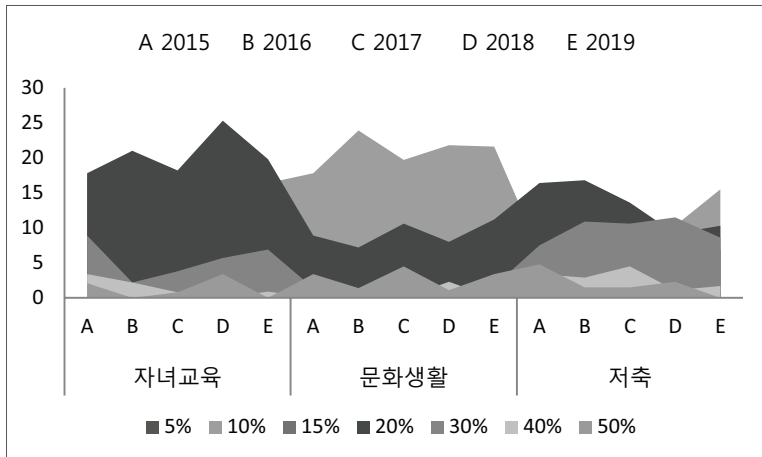
출한다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고, 입는 것과 자녀교육, 저축 순으로 20%를 지출한다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은 편이다. 주택과 문화생활에는 10%를 지출한다는 응답자들이 많다. 2018년에 들어 20%를 저축한다고 하는 응답자들이 감소하고 10%를 지출한다는 응답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비해 자녀교육, 문화생활, 주택, 저축과 같은 것들에는 덜 지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에는 전체 항목들에서 지출정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그림 3-5〉 월평균지출비중 추이(의식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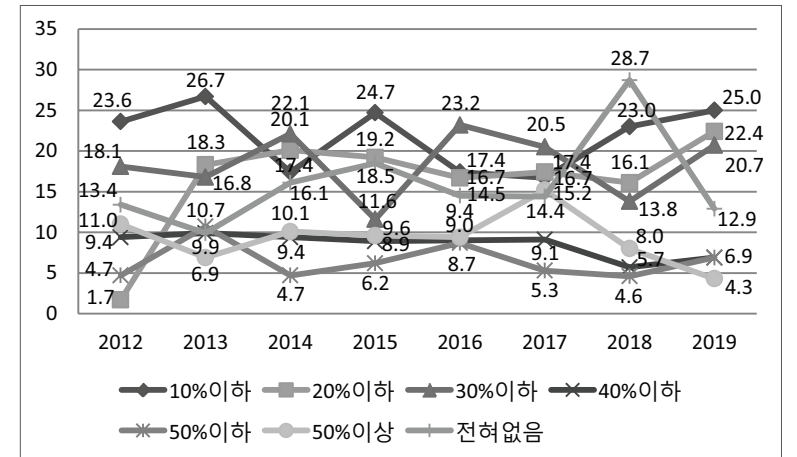
(단위: %)



〈그림 3-6〉 월평균지출비중 추이(교육/문화생활/저축) (단위: %)



〈그림 3-7〉 수입 중 뇌물비중 (단위: %)



### (3) 수입 대 뇌물비중

〈그림 3-7〉에서 수입 중 뇌물비중이 〈전혀 없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은 2018년으로 28.7%이다. 대체적으로 뇌물의 지출비중은 10-30% 범위가 가장 많은 편이다. 10%미만의 뇌물비중은 2013년에 26.7%로 가장 높았고, 2016년을 기점으로 17.4%까지 감소하였으나 다시 2019년에 25%로 증가하였다. 30%미만의 뇌물비중은 2012년 13.4%에서 9.8% 증가하여 2016년 23.3%를 나타냈으나 2018년에 급격히 감소하여 8%를 보이면서 10%와 20%를 앞세웠다. 2019년에는 10-30% 뇌물비중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 3) 일상생활에서의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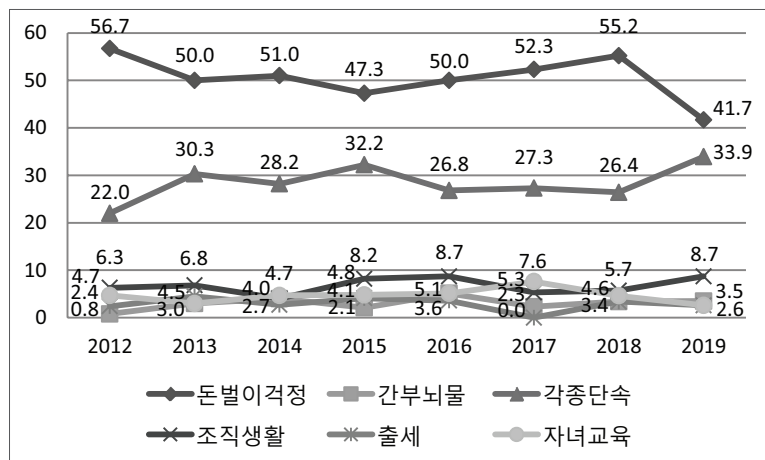
일상생활에서의 고민은 돈벌이걱정, 각종 단속(손전화, 탈북, 마약, 비사검열 등), 조직생활, 자녀교육 순이다. 상대적으로 돈벌이나 단속에 비해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이 약 40-50%이상 낫다. 2019년에는 돈벌이 걱정이 전해에 비해 13.5% 크게 감소한 41.7%를 보인다. 이와 함께 각종 단속에 대한 걱정이 7.5% 증가하면서 돈벌이 걱정과의 격차가 전년도 격차 28.8%에서 7.8%로 좁혀졌다.

사실상 2015년부터 돈벌이 걱정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면서 각종 단속에 대한 고민이 비교적 낮아졌던 것은 대북제재 등으로 내수시장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백두산, 갈마지구

건설, 발전소건설,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건설, 등 굵직굵직한 건설 공사들을 위해 자재와 자금 활용에 용이한 시장과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대폭 완화했던 시기이다.<sup>13</sup> 그러나 2018년부터 다시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각종 통제에 대한 고민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sup>14</sup> 특히 양강도는 연 중 가장 많은 검열과 중복 통제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배경이 지역적 차원에서 조사결과에 반영될 수 있다.<sup>15</sup>

〈그림 3-8〉 일상생활에서의 고민

(단위: %)



13\_김정은, “北시장 통제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 『데일리NK』, 2015.12.21.

14\_하윤아, “비사회주의 그루뵤, 北 전역서 자본주의풍 대대적 단속,” 『데일리NK』, 2018.05.04.; 강미진, “北주민들, 비사회주의 검열에 ‘폭동 일어날 것’ 불만 고조,” 『데일리NK』, 2018.04.19.

15\_이번 조사에서 양강도 출신의 설문자들은 전체 설문자의 54.35%를 차지한다.

### 3. 시장화의 사회경제적 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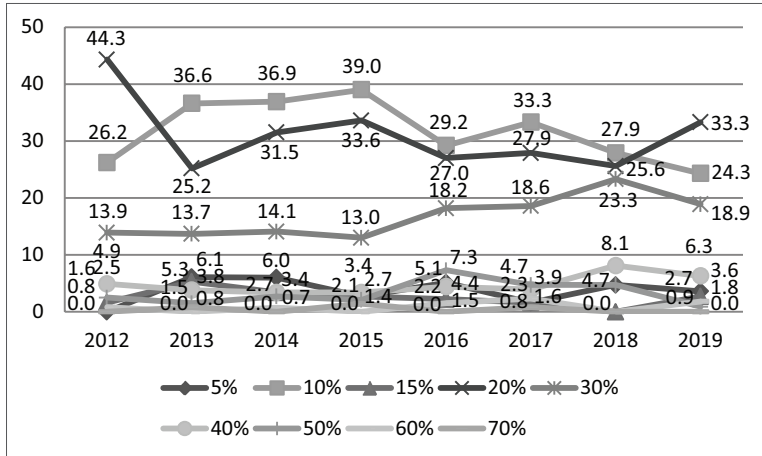
#### 1) 북한사회의 일반적 계층구조

계층구조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은 북한 거주시 상층, 중층, 하층 비율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당시에는 44.3%의 응답자들이 상층비율을 20%로 보고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2013-18년까지는 상층비율을 10%라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우세하다. 2019년에 들어서는 다시 20%라고 보고 있는 응답자들이 33.3%로 증가했다. 중층은 30%라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들이 20%로 보는 응답자들에 비해 약 2배 이상 압도적이다. 2018년에는 30%와 20%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의 격차가 8.2% 줄어들었으나, 2019년에 들어 다시 31.2%나 급격하게 감소한 9.8%를 보이고 있다. 결국 북한사회 중층 비율이 30%라고 보는 응답자들의 견해가 보다 우세한 것이다. 하층비율은 50%에 이어 60%로 보는 견해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사회의 상층비율은 10%정도이고 중층은 30%, 하층은 50-60%선에 머물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과 함께 상층비율은 점차적으로 낮아졌으나 2019년에 들어 다시 높아진 결과를 보여준다. 중층에서의 변화는 크게 없으나 하층에서는 2012년 50%선에서 점차 60%선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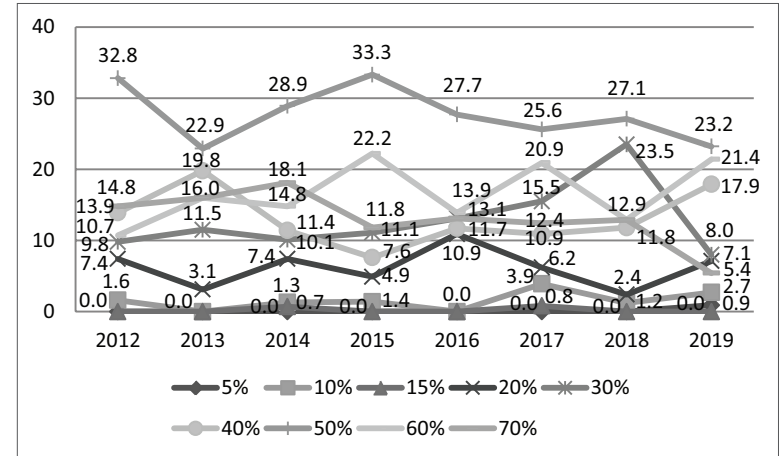
〈그림 3-9〉 상층비율에 대한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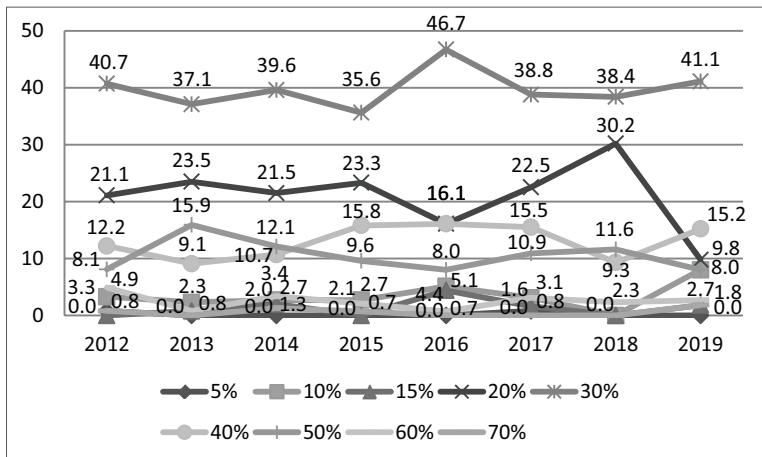
〈그림 3-11〉 하층비율에 대한 인식

(단위: %)



〈그림 3-10〉 중층비율에 대한 인식

(단위: %)



## 2) 주요 도시별 계층분화

2019년 현재 가장 잘 사는 도시 상위 순으로는 나선시-신의주시-평성시 순으로 각각 35.3%, 25.9%, 20.7%이다. 나선시는 조사 이래 연속 압도적으로 잘 사는 도시로 인정되지만, 2014년에는 30.2%로 낮아졌다가 다시 40%(2016), 46.6%(2017)순으로 긍정비율이 상승했다. 그러나 2019년 들어 35.3%로 크게 낮아진 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중·러 전략적 상호의존과 협력의 정치경제가 작용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2013.2)과 장성택 처형(2013.12), 중국의 북한 원유공급중단(2014), 등이 나진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침체위기를 가속화하기에 이른다.<sup>16</sup> 그러나 다시 2015년부터 러시아참여로 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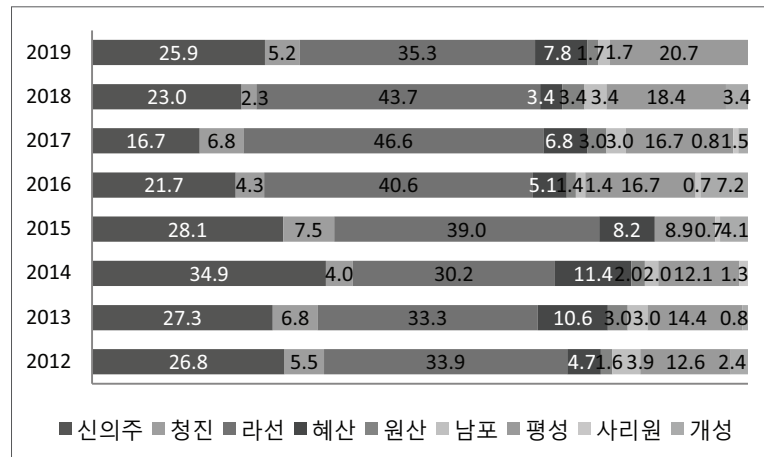
16\_이영훈, "나진경제특구 개발의 결정요인 및 전망," 제주평화연구원 정책포럼, 2015, p. 6.

북·중·러 3개국의 신나진경제무역지대 개발정책(경제개발 및 관광개발정책)이 가동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2016년 조사에서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신의주시는 2014년 조사에서 전체 조사기간 중 가장 높은 비율로 34.9%를 차지한다. 이 시기는 단동-신의주 관광 상품의 확대, 신의주국제경제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에 대한 북중 공동개발 및 참여정책이 가시화되던 시기다. 그러나 2016년부터 북핵문제에 따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수위(2016년 2차, 2017년 4차)가 점차 높아지면서 2017년에 신의주시에 대한 긍정비율은 16.7%로 떨어졌다. 그러나 2018년부터 북·중관계의 회복으로 단동-신의주 관광재개와 경제개발협력이 활발해지면서 2019년에는 25.9%로 긍정비율이 상승했다.

〈그림 3-12〉 가장 잘 사는 도시 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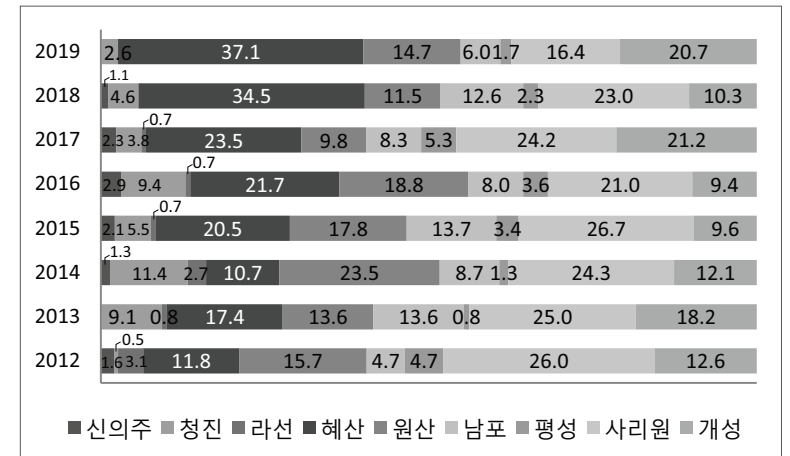


나선시와 신의주시는 북·중 관계 혹은 대외관계의 냉온탕이 반복되는 구조적 환경의 영향력에 상당히 민감한 도시들이다. 이러한 영향력은 시장네트워크에 따른 지역 간 시장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나선시와 신의주시로부터 가장 많은 시장상품들이 공급되는 1차 중심지로서의 평성시가 그렇다. 평성시는 2014년부터 긍정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 역대로 가장 낮은 8.9%를 보였다. 그리고 2016년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20.7%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2012년 첫 조사에서 가장 못 사는 도시 순위가 사리원(26%), 원산(15.7%), 개성(12.6%), 혜산(11.8%) 순이었다. 그러나 2019년 조사에서는 2012년의 조사결과를 뒤집으면서 현재로 가장 못 사는 도시 순위는 혜산 37.1%, 개성 20.7%, 사리원 16.4%, 원산 14.7% 순이다.

〈그림 3-13〉 가장 못 사는 도시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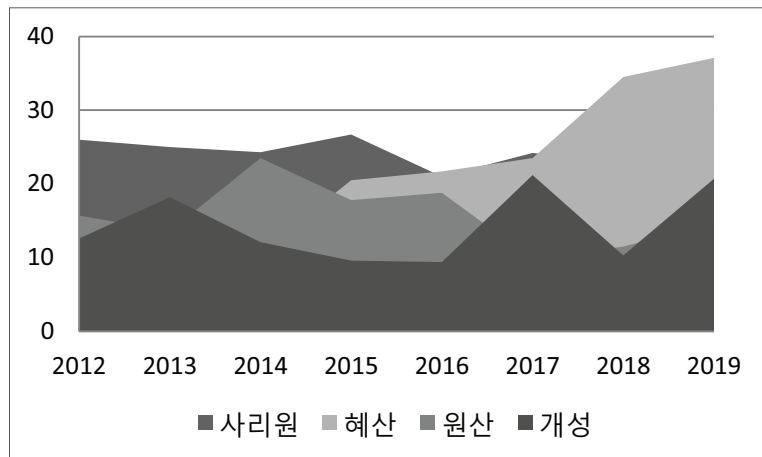
(단위: %)



〈그림 3-14〉에서는 지난 8년간 하위 4개 도시순위의 변동관계를 보여준다. 사리원시는 2012-17년에 6년 연속으로 하위 1위 도시였으나, 2018-19년 사이에 혜산시와 개성시에 1, 2순위를 내주고 3순위에 올랐다. 원산시와 개성시는 2012년에 각각 2위, 3위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3위, 4위를 오고간다.

〈그림 3-14〉 하위 4개 도시 순위의 변동관계

(단위: %)



부정적 인식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은 혜산시이다. 2015년을 기점으로 원산, 개성, 등을 제치고 2위에 올랐고, 다시 2018년에는 사리원을 제치고 가장 못 사는 지역의 1위로 지정됐다. 그리고 부정적 비율의 격차도 2위인 개성시 20.7%보다도 16.4%나 높은 37.1%로 지금까지의 조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결론적으로 혜산시는 김정은 정권 초기에 비해 하락하고, 오히려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알려졌던 사리원시는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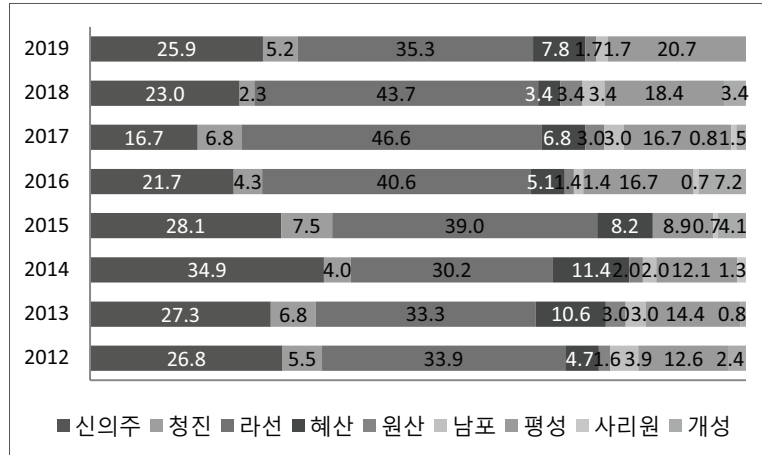
### 3) 주요 도별 계층분화

지역에 따른 도별 계층분화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2019년 현재 가장 부유한 도별 순위는 평안남도 46.9%, 양강도 18.6%, 평안북도 14.2% 순이고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자강도가 동시에 5.3%로 그 뒤를 잇는다. 이는 2012년 첫 조사(평안남도 38.4%, 함경북도 28.6%, 평안북도 12.5%, 양강도와 함경남도가 7.1%순)와 비교해볼 때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중요한 특징은 2019년 도시별 경제분화에서 혜산시가 가장 열악한 도시 1순위였지만, 가장 잘 사는 도별 순위에서는 양강도가 2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평성시가 9개 도시 중 46.9%로 압도적인 긍정비율을 차지하면서 평안남도 대 타도시의 긍정비율이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도 관련된다. 실제로 가장 잘 사는 도시 1위(평안남도)와 2위(양강도)와의 긍정비율격차는 약 2.5배 이상이다. 3위(평안북도)와도 3.3배의 차이이다. 타 도들과의 격차는 적게는 8.8배(함경남도, 함경북도, 자강도)에서 많게는 52배(강원도) 이상 차이를 보이는 지역도 있다.

〈그림 3-15〉 가장 잘 사는 도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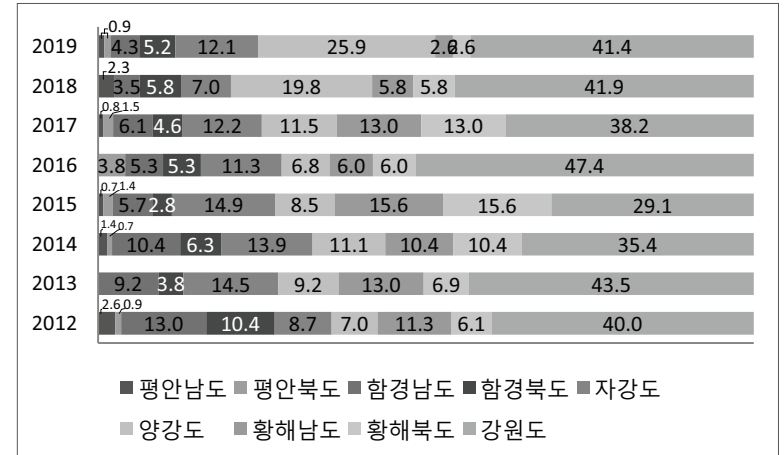
(단위: %)



2019년 조사에서 가장 못 사는 도별 순위는 강원도가 41.4%로 다른 도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1위(41.4%)다(그림 3-16). 가장 부정적 비율이 높았던 2016년(47.4%)에는 2위인 자강도(11.3%)와의 차이도 약 4.2배에 달한다. 타 지역들과의 격차는 적게는 7배(양강도), 많게는 47배(평안남도) 정도이다. 이 시기는 원산 갈마지구 관광건설 착공으로 사회적·경제적 부담들이 상당히 컸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2012년에 4위로 7.1%에 머물렀던 양강도에 대한 인식이 2017년부터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2019년에 2위(25.9%)로 올라섰다. 자강도도 전 해에 비해 부정비율이 5.1% 증가하면서 3위를 나타냈다.

〈그림 3-16〉 가장 못 사는 도별 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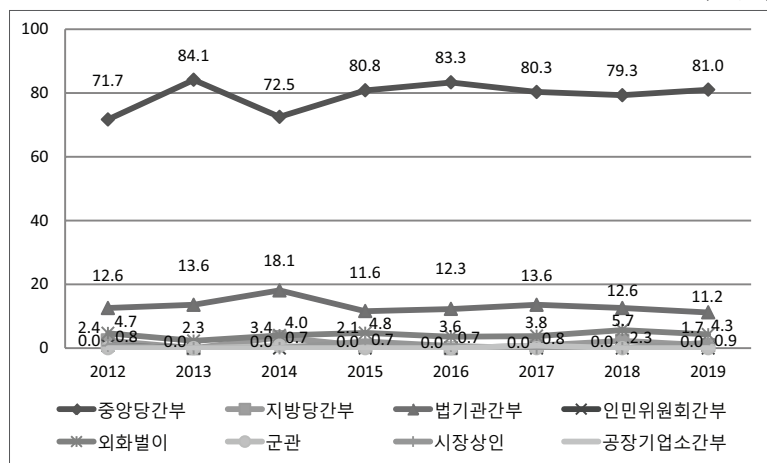
#### 4) 직업별 계층분화

직업의 귀천(貴賤)과 계층에 따른 직업별 계층분화는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인 불평등의 대표적 원인이다. 오히려 북한은 직업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직업의 격차가 주는 권력과 부의 격차는 시장화 속에서 더 높아질 개연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가장 잘 사는 직업〉 상위 1순위는 중앙당간부, 법기관간부 순이다. 중앙당간부는 2012년 71.2%에서 해마다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법기관간부와 비교해도 약 4배 이상 높다. 2019년에는 중앙당간부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데 비해, 법기관간부는 2014년(18.1%)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 뒤로 외화벌이업자(2위)와 지방당간

부(3위) 순이다. 2015년과 2018년을 제외하면 외화별이업자는 지방당 간부보다 더 잘 사는 직업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상위 2순위에서도 법기관간부와 외화별이업자와의 격차는 적게는 약 2.5배에서 많게는 45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림 3-17〉 가장 잘 사는 직업(상위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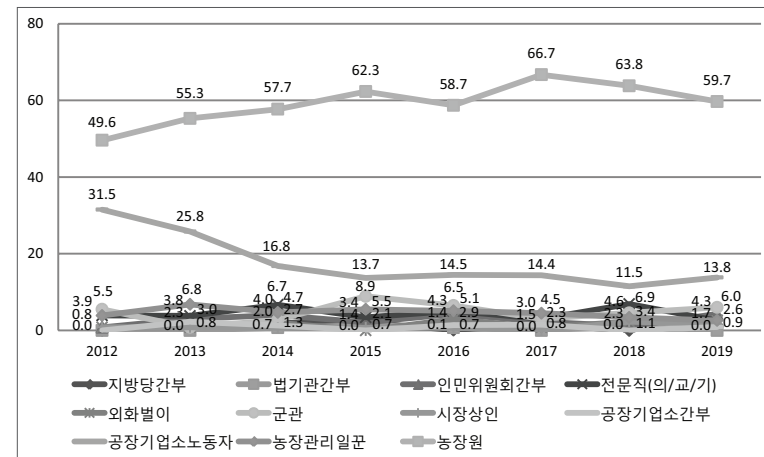
(단위: %)



〈그림 3-18〉에서 〈가장 잘 사는 직업〉으로서의 하위 1순위는 농장원, 공장기업소 노동자, 농장관리일꾼, 군관, 전문직(의사, 교사, 기술자) 순이다. 농장원은 2012년 첫 조사에서 49.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이후로 지속 증가(2017년 66.7%)했다. 반대로 공장기업소노동자의 경우, 2012년 31.5%로 비교적 높았으나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11.5%)에는 20%나 감소했다. 2019년(12.8%) 조사에서는 다시 2.3%로 소폭 올랐다.

〈그림 3-18〉 가장 잘 사는 직업(하위 1순위)

(단위: %)



이러한 결과들은 2000년대 이후 부분적인 시장개혁정책에서 6.28방침(2012)으로 이어지는 정책효과들의 부분적인 반영으로도 볼 수 있다. 우선 첫째, 7.1조치(2002)는 식량가격을 모든 가격제정의 출발점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식량이 시장의 물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둘째, 〈가족단위 분조제〉가 도시로 흩어진 농민들을 다시 농촌으로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었다. 셋째, 2012년 6.28방침으로 〈포전담당제〉가 실시되면서 농민들이 식량생산과 자금자족에 대한 기대감이 부활하고 시장과의 교환이 보다 활발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의 자율경영권이 나 가격자율성과 같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가 공장기업소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이나 임금적용에 있어 아직까지 그 경제적 효과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교사, 기술자와 같은 전문직들은 농장원이나 공장기업소노동자, 군

관, 인민위원회간부들에 비해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2018년 조사에서 군관(4.6%)를 앞선 6.9%를 나타냈지만, 그 외의 조사들에서는 모두 하위에 머물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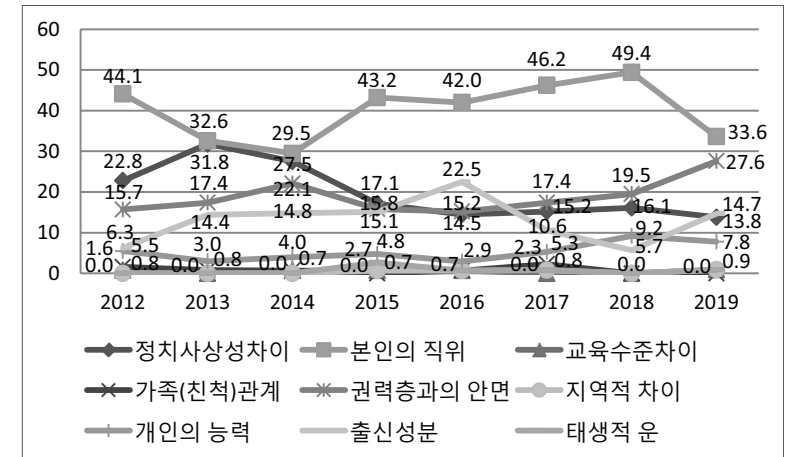
### 5) 경제적 계층분화의 이유

2019년 조사에서 경제적 계층분화의 중요한 이유로는 본인의 직위(33.6%), 권력층과의 안면(27.6%), 출신성분(14.7%), 정치사상성 차이(13.8%), 개인의 능력(7.8%)순을 이룬다. 2014년 이전까지는 본인의 직위, 정치사상성 차이, 권력층과의 안면, 출신성분 순이었으나, 2015과 2016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 실제로 2016년에는 출신성분이 권력층과의 안면이나 정치사상성을 압도하면서 본인의 직위, 출신성분 순이었다. 2018년에 다시 5번째 순위로 하락했으나 2019년에 들어 3번째로 중요시됐다.

한편, 정치사상성은 2013년 31.8%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본인의 직위나 권력층과의 안면, 심지어는 출신성분에 우선하지 않는다. 여기에 개인의 능력에 대한 비율이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결과도 중요하게 판단된다. 그것은 시장화 속에서 개인의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사상성에 대한 인식은 감소하면서도 여전히 권력과 직업이 경제적 계층분화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3-19〉 경제적 계층분화 이유

(단위: %)



## 4. 시장의 연속성과 경제적 자유

### 1) 고수입원천과 제약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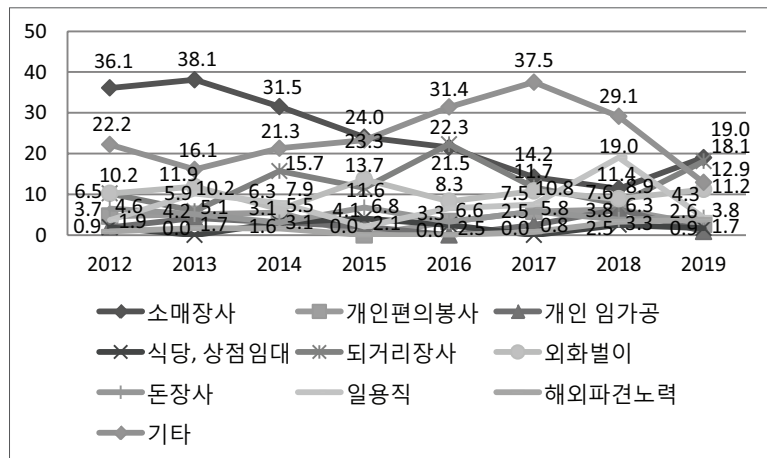
#### (1) 고수입원천과 원산지

2015년 이전까지 고수입원천으로 가장 높은 순위는 소매장사였다. 여기에 되거리장사나 외화벌이 등 9개 항목<sup>17)</sup>에 앞서 <기타>가 두 번째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공식 시장이나 직업보다 비공식 시장이나 직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소매장사>와 <기타>는 2016년부터 역전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기타>가 3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후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9년

에는 12.9%에 머무르면서 <소매장사(19%)>와 <되거리장사(18.1%)>를 앞세웠다. 결국 2019년 조사에서는 소매장사(19%), 도매장사(18.1%), 기타(12.9%), 외화별이(11.2%)순이다. 2018년 조사결과와의 차이점은 일용직이 압도적인 1위로 19%였지만, 2019년에 들어 14.7% 크게 감소한 것이다.

<그림 3-20> 주요 고수입원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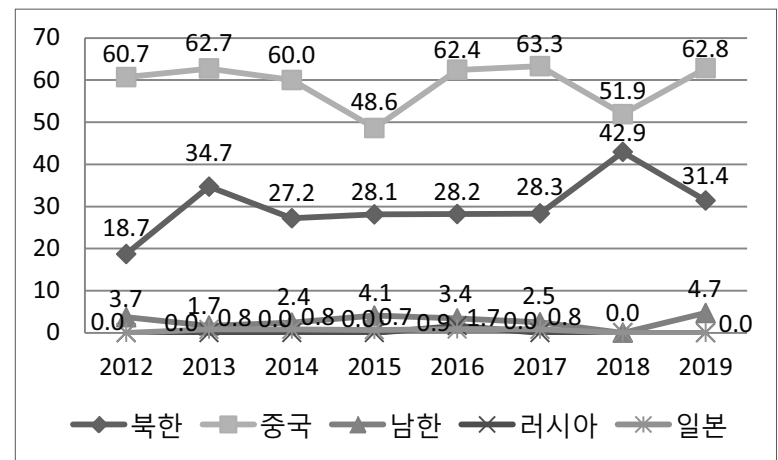


17 소매장사: 시장·매대장사·달리기·행방, 개인편의봉사: 이동미용사·전자제품수리공·집수리공, 개인임가공: 의류·신발·가구·제작, 등 가내 수공업, 되거리장사: 차판장사·도매장사, 외화별이: 수출원천·대치물자 등을 거래하는 업자, 일용직: 샅별이군으로 가대기군·소토지 임대노력·바다 임시노력, 해외파견노력: 벌목·건설·식당·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파견된 해외노동 인력. ; 이러한 분류기준들은 2012년 첫 조사 당시 도입된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다. 주로 북한시장들에서 통용되고 있는 시장 경제활동의 유형과 일반적인 용어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북한에서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을 설문대상으로 한다는 배경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기준들이 시장화속에서 북한주민의 보편적인 경제활동 유형으로 코드화하는 데는 일정한 문제가 뒤따른다. 예를 들면, 소매장사와 도매장사의 분류기준(시장에도 소매와 도매장사가 있다), 되거리장사와 달리기(되거리과 달리기는 서로 동일한 측면이 있다)의 충돌, 외화별이와 차판장사의 충돌(차판장사에는 외화별이업자들과 돈주들, 등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된다), 행방과 달리기의 충돌, 등 많은 요소들이 중첩되거나 충돌한다. 이러한 중첩이나 충돌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일련의 수정 및 검토과정들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북한 시장경제활동의 유형들을 한국의 표준 직업분류에 따라 유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수입원산지로는 여전이 중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수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고수입원들 중 약 50%이상이 중국산이고, 북한산이 20-30%선에서 그 뒤를 잇는다. 3위로는 남한산으로 2019년 조사에서는 전해에 비해 4.7%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은 2012년 18.7%에서 2013년에 21%나 급등한 34.7%를 기록했고, 김정은 집권 7년차인 2018년에 이르러 42.9%로 급상승하였다. 결과 중국산(51.9%)과의 격차가 9%로 줄어들었다. 2019년 조사에서는 다시 11.5% 감소하여 31.4%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 3월 북한 경공업대회를 기점으로 북한의 국산화정책이 북한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1> 고수입원산지 국가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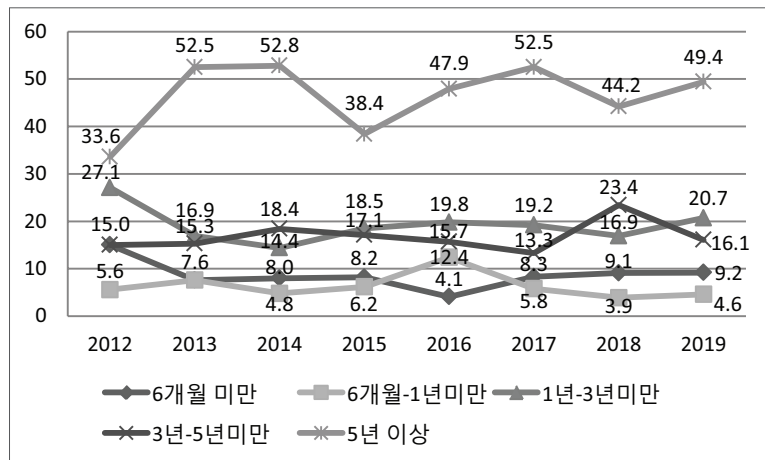


(2) 고수입원 근무기간과 제약조건

고수입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은 그 이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장기근속으로는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1년-3년 미만> 응답자들에 비해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 차이난다. 다만 2012년 조사에서는 <5년 이상>이 33.6%로 현재까지의 조사 중 가장 낮았지만, <1년-3년 미만>은 27.1%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는 2012년 이후 <5년 이상> 근무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대신, <1년-3년 미만> 근무자들이 대폭 줄어든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3-22> 고수입원 근무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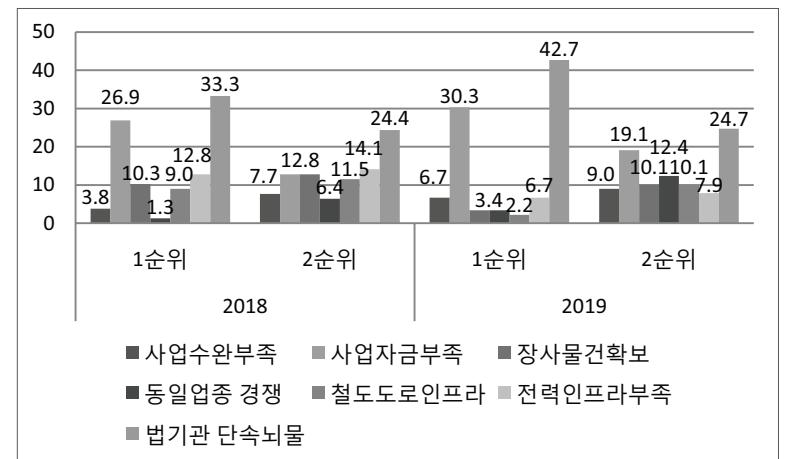
고수입원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는 데 어떠한 애로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2018년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다. 조사결과 가장 큰 어려움은 1순위와 2순위 모두 법기관 단속으로 인한 뇌물이다. 2019년에는 전해에 비해 부정적 비율이 9.4% 증가한 42.7%이다. 그 뒤로 사업자금 부족, 전력

인프라 순이다. 사업자금 부족에 대한 비율은 2019년에 30.3%로 전해(26.9%)에 비해 더 높아진 편이고, 전력인프라부족은 오히려 전해(12.8%)에 비해 6.7%로 부정비율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2순위에서는 법기관 단속뇌물을 제외하면, 사업자금 부족, 장사물 건 확보, 철도도로인프라, 전력인프라 부족 등이 지적된다. 사업자금 부족은 전해(12.8%)에 비해 6.2% 증가한 19.1%를 보였다. 장사물건확보는 부정비율이 2.7% 감소한 10.1%정도이다. 철도도로인프라도 1.4% 소폭 감소한 10.1%이다. 전력인프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6.2%로 크게 감소한 7.9%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2018년에 비해 전기·교통인프라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게 감소한 특징이 있다.

<그림 3-23> 고수입원 애로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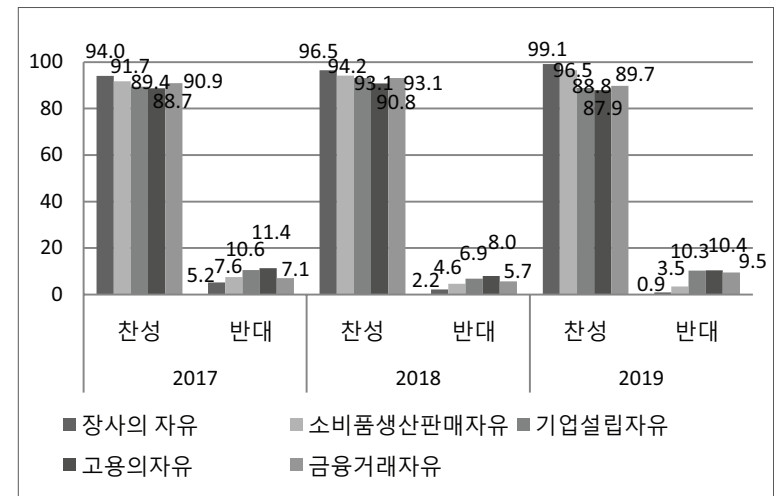
## 2) 경제적자유와 제반조건

5대 자유조건(장사의 자유, 소비품생산 및 판매의 자유, 기업설립의 자유, 고용의 자유, 금융거래의 자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80%이상 높은 것으로 약 100%에 가깝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조사는 2017년에 시작된 신규조사항목이다. 순위로는 장사의 자유, 소비품생산 및 판매의 자유, 금융거래의 자유, 기업설립의 자유, 고용의 자유 순이다.

3년간 조사결과의 차이점은 장사와 소비품에 대한 자유에 찬성하는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는 반면, 고용과 금융거래에 대한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설립과 고용, 금융거래의 3가지 항목에서는 2018년에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 들어 다시 소폭 감소세다. 즉 금융거래의 자유를 반대하는 비율은 3.7%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비공식 시장영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사금융시장과 권력기관의 비호를 받는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차이로 분석된다.

〈그림 3-24〉 경제적 자유의 제반조건

(단위: %)



## 5. 경제개혁과 경제발전

### 1) 북한경제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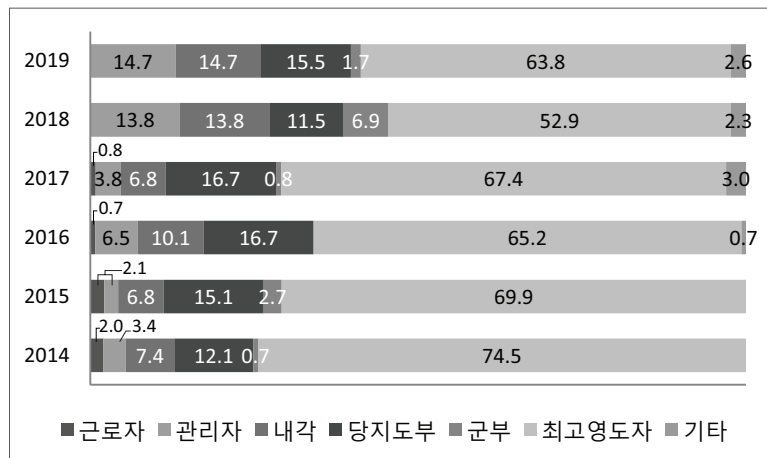
북한 경제가 가장 어려운 순위 1순위는 2014년 조사 이래 연속 <최고영도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2019년 조사에서 1순위는 최고영도자 63.8%, 당지도부 15.5%, 내각·관리자 14.7%순이다. 그리고 6년 연속 최고지도자와 당지도부는 1위와 2위에서 유지된 상태다. 그러나 최고지도자에 대한 부정비율은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가 특징이다. 특히 2018년에는 52.9%로 감소하면서 2014년에 비해 21.6%

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큰 변화다. 이에 따라 당지도부에 대한 부정비율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관리자와 내각에 대한 부정비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내각의 책임일꾼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2.3% 증가한 13.8%를 보이면서 당지도부 11.5%를 넘어섰다. 관리자는 전년대비 (6.8%) 거의 배로 증가한 13.8%를 나타내면서 다른 항목들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는 북한경제의 어려움을 중앙기관이나 당지도부 등 최고기관에 전가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산업구조의 생산현장들과 기업 및 생활 인프라 속에 잠재되어 있는 독점, 부패, 권력, 등과 같은 시장화의 이질적인 관계들에 대한 피로감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마다 관리자와 내각에 대한 부정비율의 증가폭은 당지도부의 증가폭에 비해 비교적 큰 편이다.

〈그림 3-25〉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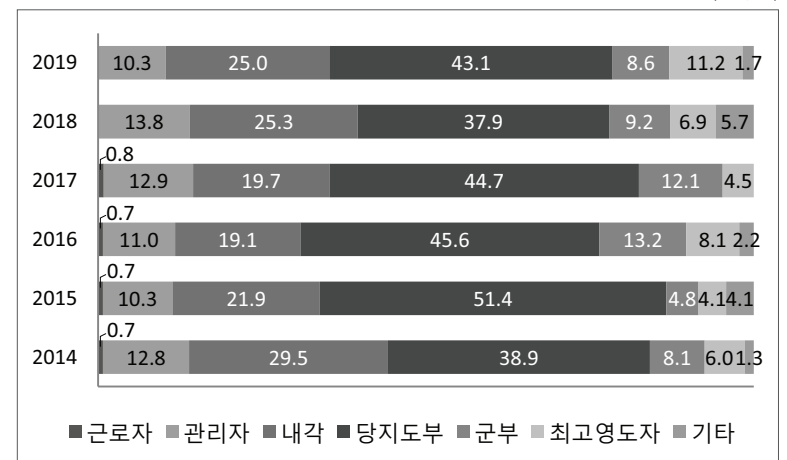
(단위: %)



2015년까지 2순위는 당지도부, 내각, 관리자, 군부 순이었으나, 2016년에 들어 관리자에 비해 군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8</sup> 2018년에는 당지도부에 대한 비율이 전해에 비해 7.2%로 크게 감소하고, 오히려 내각과 관리자에 대한 부정비율이 각각 5.6%, 0.9%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9년에 들어 다시 당지도부, 내각, 관리자, 최고영도자, 군부 순으로 나타났다. <당지도부>는 5.2% 증가한 데 비해, <관리자>와 <내각관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각각 3.5%, 0.3%로 소폭 하락하고 있다.

〈그림 3-26〉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2순위)

(단위: %)



18\_근로자, 관리자, 내각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는 노동자, 농민, 사무원, 관리자는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 농장관리위원장, 등, 내각은 총리, 상, 국가계획위원장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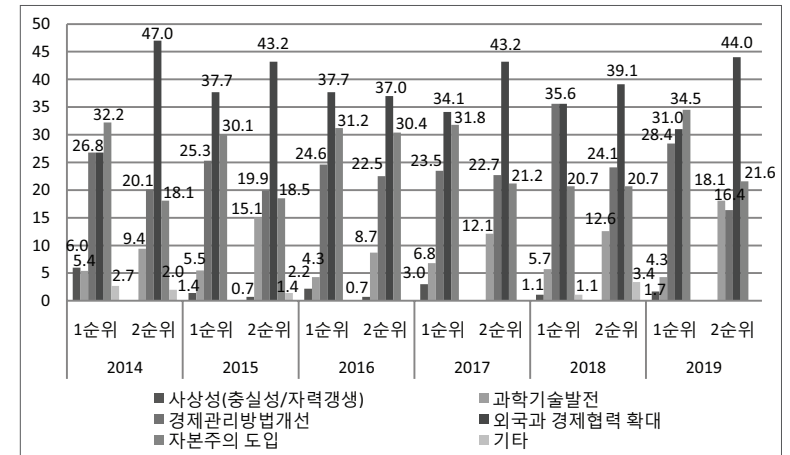
## 2) 경제발전의 제반조건

경제발전을 위한 제반조건으로는 1순위와 2순위에서 모두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4년과 2019년 조사에서 1순위는 <자본주의 도입>이 1위였으나, 2순위에서는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2순위에서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는 2014(4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44%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관리개선방법>에 대한 인식은 2014년에 이어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8년에 들어 35.6%로 최고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2019년에는 6.8%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경제관리개선은 외국과의 협력과 자본주의 도입에 우선하지 않는다. 이는 2012년 6월 경제관리개선방법이 도입된 이후 정책의 실효성이나 시장의 효율성에 있어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도입과 전환만이 북한 경제발전의 실질적인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7〉 경제발전을 위한 제반조건

(단위: %)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인식은 <자본주의 도입>이나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와 비교할 때, 적게는 20배에서 많게는 40배까지도 격차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13년 국산화정책과 함께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을 해마다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특구정책과 같이 개혁개방을 통한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보다 중요한 경제발전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2013년 이후로 경제개발지대정책들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미 나진경제무역지대나 신의주, 혜산시와 같은 국경지역에서의 공식·비공식 경제교류에 따른 시장화의 경제성은 북한주민들에게 외국과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절대적인 학습효과를 낳았다. 따라서 국내의 다양한 경제정책이나 과학기술정책들이 북한 국산화정책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지는 몰라도, 북한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외국과의 경제협력이나 이를 통한 자본주의 도입이 국가경제발전의 최우선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6. 평가와 시사점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북한 시장화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에서 시장화는 주민들의 계층이동에 적지 않은 영향으로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객관적·주관적 인식에 따른 계층분화가 그것을 설명한다. ①객관적 인식에 따른 북한주민의 상층비율(김정은 정권)은 10%정도이고, 중층은 30%, 하층은 50%에서 60%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②주관적 인식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 이전하면서 2017년 이전까지는 상층과 하층이 감소하고 중층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8년 이후에는 상층과 중층이 증가하고 하층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A에서 D로 가면서 중층에서 상층으로 이전한 경우, ㉡A에서 D로 가면서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전한 경우, ㉢2018년 이후 응답자들 속에 중층과 상층이 더 포함된 경우이다. ㉠과 ㉡의 경우는 신흥 상층 혹은 신흥부자의 출현으로 볼 수 있는 가능한 해석이다.

둘째, 도시별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 주요 경제개발지대들로 주목받고 있는 원산과 혜산, 개성에 대한 도시별 격차가 가장 심한 편이다. 혜산과 개성은 김정은 정권에 들어 하위도시로 연속 하락하는 반면, 오히려 사리원에 대한 긍정비율은 소폭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도별 순위에서는 강원도와 양강도가 1, 2순위로 열악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배경에는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건설과 백두산-삼지연 건설 등, 김정은 정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

개발정책과 관련된 건설공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피로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양강도와는 7배, 평안남도와는 47배의 큰 격차를 보인다.

셋째, 북한주민들의 대부분은 먹는것과 입는 것에 비해 자녀교육, 문화생활, 주택, 저축과 같은 항목들에 덜 지출한다. 전체 수입중의 10-30%가 뇌물비중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고민은 여전히 돈벌이 걱정과 각종 단속에 대한 걱정이다. 그러다보니 법기관 단속에 따른 뇌물이 가장 큰 고민으로 드러난다.

넷째, 북한에서 장사활동에 유리한 고수입원산지로는 중국이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3년 3월 국산화정책 이후 북한산에 대한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8년에는 국산화의 비중이 42.9%로 중국산(51.9%)과의 격차를 9%로 좁혔다. 전년대비 35%에서 24%나 감소한 수치다. 그리고 2019년 조사에서는 자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북한산 비중이 30%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1인 가족의 경우 직장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지만, 3인 이상 가족의 경우 가족수에 비한 직장인 수가 줄고 있다. 따라서 장사가족수 대 장사직장인의 수도 따라서 줄고 있다. 이는 가족단위 혹은 가족전체의 장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직장 외 부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과도 일치한다.

여섯째, 북한경제가 어려운 이유로는 최고지도자가 압도적인 1순위이지만, 2014년 이후 비교적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2018년에는 5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가장 큰 변화는 관리자와 내각에 대한 부정비율의 증가폭이 당지도부에 비해 비교적 큰 것이다. 이것은

북한경제의 어려움이 최고지도자나 당지도부에도 있지만, 내각이나 중앙기관, 그리고 실질적인 기업이나 경제관리주체들의 책임문제도 지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한 경제개혁의 우선순위는 과학기술정책이나 경제관리개선조치에 앞서 외국기업들과의 협력 확대, 자본주의 도입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주민들의 의식에 내제되어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대북제재의 여파 속에서도 북한 시장화는 자력갱생의 보루로 여전히 역동적이다. 이제 북한 시장화는 주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생존방식의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는 북한경제의 중점 활력소로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에 현대문명을 보급시키고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에 빠르게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가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기업과 시장이 함께 공생하고 경쟁하면서 양적 변화는 물론 질적 변화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 제품경쟁에서 생산 경쟁까지 더 많은 시장을 점유하고 공략하기 위한 경쟁의식이 북한시장에 내제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은 통제와 사회주의 물문의식에 함몰되어 경제적 자유의 원리에 이율배반적이다. 통제와 권력이 시장을 위축시키고 때로는 조정하기도 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강화되는 결과를 배출하기도 한다.

여기에 2014년 이후 대중수출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북한 시장에서는 국산 상품의 거래비중이 서서히 증가하고,<sup>19</sup> 대외무역의 충격에 비해 북한경제 및 시장의 내구성이 여전히 살아있다. 대외 수출 및 수입의 감소로 국내 외화유통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이것이 시장 통화량의 감소,

구매력의 하락,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 시장의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부동산시장이나 주택시장과 같은 실물시장에서는 그 후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미 2018년부터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도시들에서 부동산 및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실질 통화량이 감소하면서 생필품 및 식량, 교역재의 안정(불변), 등으로 시장의 거래량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sup>20</sup> 미북 비핵화협사의 교착국면이 장기화될수록 이러한 변동이 2020년 북한경제와 시장에 대한 새로운 변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남아있다. 또한 국내 기업과 시장에 대한 상생정책이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통제정책들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 북한의 '정면돌파전' 전략에 따른 핵역지력강화와 국가 경제발전의 병진노선으로 시장에 대한 국가의 의존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시장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19\_K-stat, <http://stat.kita.net/stat/istat/kpts/KptsWholeList.screen>(검색일: 2019. 12. 09.); 이석, "2018년 북한경제, 위기인가 버티기인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9, p. 15.

20\_이석 (2019), pp. 23-24.; 김석진, "2018년 북한 시장동향과 2019년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19, p. 60.



제4장  
보건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4장 보건

| 박상민 서울대 의과대학, 이해원 서울의료원

### 1. 서론

본 장에서는 북한의 보건의료실태 특히 의료기관의 실태와 병원 이용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북한의 보건의료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지표들을 1990년 중반부터 추적해 보면 많은 지표들 중 특히 다양한 원인의 사망률 지표들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성사망비, 5세이하 아동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등 취약계층 인구군의 보건의료지표들이 개선된 대표적인 지표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의료지표의 향상은 북한 보건의료시스템의 서비스 향상으로 인한 개선보다 북한 경제 상황의 변화와 고난의 행군 이후 새로이 형성된 자생적 의료시장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 주민 특히 어린이의 영양 상태를 대표하는 지표의 변화를 사례로 먼저 살펴보겠다. 북한 어린이의 영양 상태에 대한 전국단위 조사가 1998년 이후 2017년<sup>21</sup>까지 정기적으로 이뤄졌다. 1998년 이후 전 연령층, 그리고 5세 이하 아동들의 단기 영양장애 비율이 단계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5년 이후 상대적으로 큰 폭

의 개선이 있었고, 2012년 이후 한 번의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지역 중 강원도와 자강도(2002년, 2004년)가 제외된 년도가 두 차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외 조사에서는 모든 도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고, 도별로 격차는 있으나 모든 도들도 지표의 개선을 보였다.

〈표 4-1〉 북한의 단기 영양장애(Wasting) (1998-2007)

(단위: %)

연도	1998	2000	2002	2004	2009	2012	2017
전체 (0-84세)	60.6	27.9	20.2	23.4	18.8	15.2	9.3
5세 이하 아동 (0-5세)	-	7.7	7.6	11.2	5.6	2.9	0.8

북한 정부의 식량배급제(Public Distribution System, PDS)는 2016년 기준 성인 일일 필요열량의 반 이하 수준의 배급(380g/인/일)이 이뤄졌고, 수요 대비 공급은 지속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22</sup> 북한 주민의 식량공급은 배급제 외 시장에 의존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열흘에 한번 열리는 농민시장(Farmers' market)등의 시장들이 다양한 식품과 생필품을 유통하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고 UN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23</sup> 국가 단위 농업생산량이 감소하고, 정부의 배급

21\_ 1998년 종합지표조사(MICS) 1, 2000년 종합지표조사(MICS) 2, 2002년 북한영양평가(DPRK Nutrition Assessment), 2004년 북한영양평가(DPRK Nutrition Assessment) 2009년 종합지표조사(MICS) 4, 2012년 전국 영양조사(National Nutritional Survey), 2017년 종합지표조사(MICS) 6

22\_DPRK Needs and Priority, 2017

23\_DPRK Needs and Priority, 2018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영양장애의 호전이 있었던 것은 지역별 시장경제의 활성화가 북한주민의 건강상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예측하게 된다. 식량 및 생필품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에도 시장의 역할이 확장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보건의료영역에서 비공식 또는 공식적인 의료시장의 영역을 설문조사 결과로 확인하려고 한다.

## 2. 북한 보건의료 실태

### 1) 의료기관별 실태 : 리인민병원 및 리진료소, 시·군(구역) 인민병원, 도 혹은 중앙병원

북한에서 응답자 본인 또는 가족이 몸이 아픈 경우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또한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였는가에 대한 설문조사가 2018년에 시행되었고, 조사결과 의료기관 방문 없이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약을 사서 먹었다는 답변이 50.6%를 차지할 정도로 북한의 보건의료기관의 이용이 확연히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리인민병원을 14.9%가 찾았고, 시·군(구역) 인민병원은 9.2%, 도 병원은 2.3%로 상위기관 병원의 이용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조사결과 확인하였다. 2019년도에서는 동일 질문이 조사되지 않았으나 각 병원별 의료진, 의약품, 의료기기의 부족 여부에 대한 조사가 2018년에 이어 재조사되었다. 각 병원별 ‘의료진, 의약품, 의료기기가 충분하다’의 답변은 병원

상관없이 모두 줄었고, ‘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없다’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 리인민병원과 시·군(구역) 인민병원 등 ‘병원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경험의 답변자 비율이 2019년도에 더욱 증가하였다. 도급 또는 중앙병원의 물품 및 인력 상황이 리 또는 시·군·구역의 상황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따라 상급병원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닌가 예측할 수 있는 조사결과들이 나왔다. 2019년 리인민병원이나 진료소에 충분한 의약품과 의료진이 있다는 답변은 0으로 말단병원의 재원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열악할 것으로 파악된다.

〈표 4-2〉 북한의료기관의 실태(2018, 2019)

(단위: 명, (%))

구분	리인민병원이나 진료소		시군(구역)인민병원		도 혹은 중앙병원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의료진과 약품, 의료기기가 충분했다	1 (1.1)	0 (0.0)	5 (5.7)	3 (2.0)	5 (5.7)	5 (4.0)
의료진과 의료기기는 충분했지만 약품이 부족했다	2 (2.3)	6 (5.0)	3 (3.4)	13 (11.0)	4 (4.6)	12 (10.0)
의료진은 충분했지만 의료기기와 약품이 부족했다	11 (12.6)	10 (8.0)	17 (19.5)	16 (13.0)	10 (11.5)	11 (9.0)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	28 (32.2)	33 (28.0)	30 (34.5)	28 (24.0)	9 (10.3)	16 (13.0)
이용한 경험이 없다	43 (49.4)	64 (55.0)	32 (36.8)	52 (45.0)	56 (64.4)	68 (59.0)
계	87 (100.0)	115 (100.0)	87 (100.0)	115 (100.0)	87 (100.0)	115 (100.0)



북한 병원으로 공급되는 의약품은 중앙에서 각 도급 의약품관리소로 공급된 후 순차적으로 시 그리고 리 단위로 전달된다. 따라서 공급량이 부족할수록 리단위 병원으로 공급되는 의약품 및 물품은 감소될 수뿐이 없다. 리단위 병원 및 진료소로 직접 필수약품이나 물품이 공급되는 국제기구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으나, 해당기관(UNICEF, UNFPA, WHO 등)들의 대상 지역에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자강도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 대부분이 양강도와 함경북도에서 거주했던 주민임을 고려할 때 외부 지원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게 미치는 지역의 상황은 의료시장과 약국 등과 같은 병원 외 구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 변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무상치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였는지 만족도 조사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하였다. 북한의 무상치료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 ‘보통’, ‘조금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중 선택하는 질문이다.

2019년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불만족한다’고 답변한 대상자의 비율이 33%으로 2017년, 2018년과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비율의 수치가 조금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조금 불만족’ 그리고 ‘매우 불만족’을 합친 ‘만족하지 못한다’의 부정적 의견(50%)이 긍정적 의견(매우만족과 조금 만족을 합친 값)의 비율(19%)보

다 훨씬 높았다. 부정적 의견이 절대적 우위이기는 하나, 긍정적 의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함도 확인할 수 있었다. 12.3%(2017년)에서 19%(2019년)으로 긍정적 의견의 증가는 일부이지만 경제적 여건이 좋다면 의료서비스가 만족할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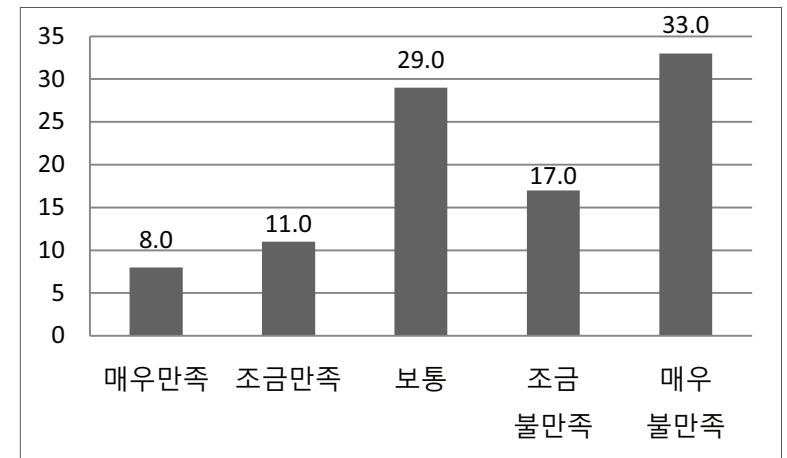
〈표 4-3〉 북한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만족	조금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합계	평균
2017	8 (6.1)	8 (6.1)	40 (30.5)	15 (11.5)	60 (45.8)	131 (100.0)	2.15
2018	4 (4.6)	10 (11.5)	20 (23.0)	18 (20.7)	35 (40.2)	87 (100.0)	2.20
2019	10 (8.0)	13 (11.0)	34 (29.0)	20 (17.0)	38 (33.0)	115 (100.0)	3.57

〈그림 4-1〉 무상치료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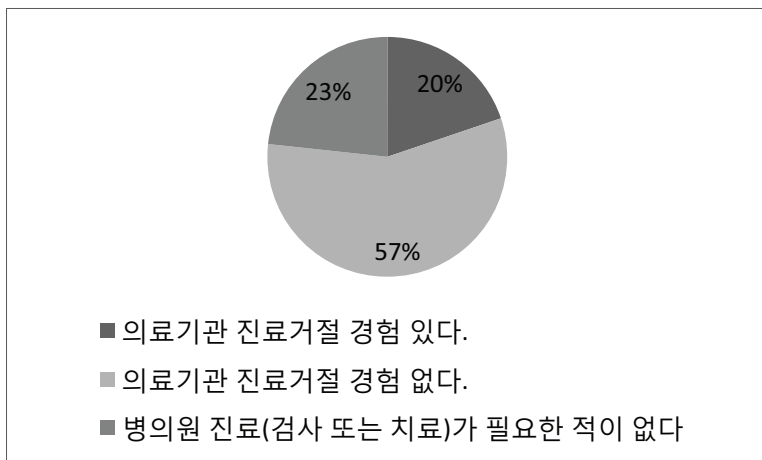
### 3. 북한 보건의료의 접근성 격차

2019년 조사에서는 의료기관의 이용실태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북한에서(탈북 직전 1년 동안) 병의원, 진료소(치과 제외)의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 답변자의 57%가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진료를 받지 못한 사유는 병원에 가도 적절한 장비와 물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44%의 답변자들이 가장 많이 답했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 이유(22%)로 인해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물품 및 자원 부족이 북한의 의료접근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조사결과이다.

#### 1) 의료기관 이용 실태 : 진료거절 경험과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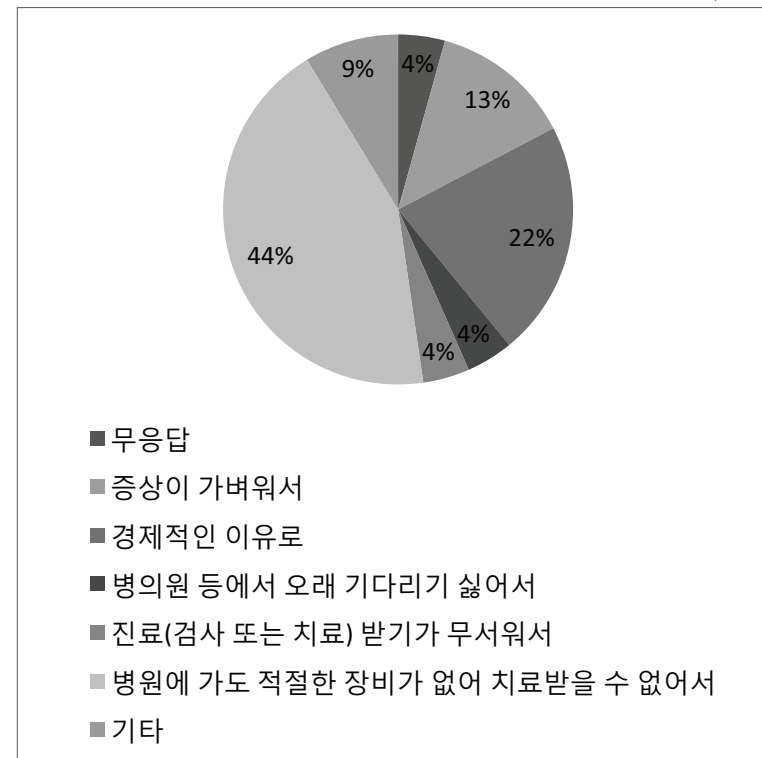
〈그림 4-2〉 의료기관 이용 중 진료거절 경험

(단위: %)



〈그림 4-3〉 의료기관 이용경험 중 진료거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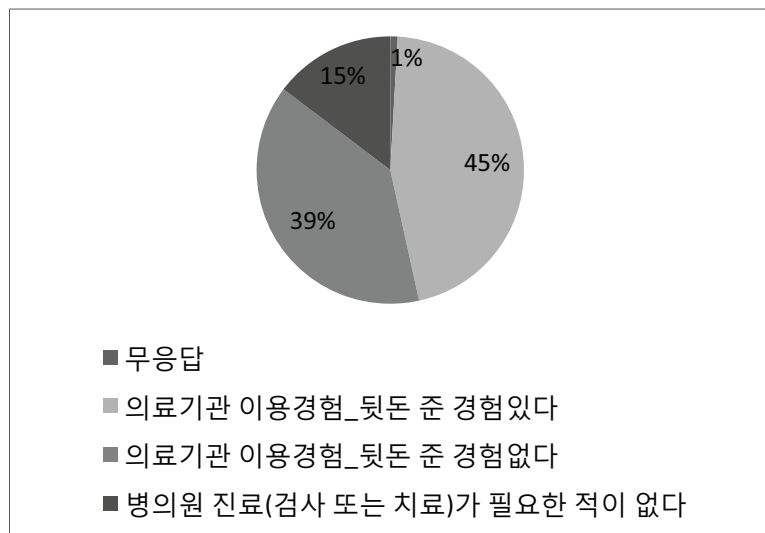
(단위: %)



보건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의약품 및 의료물품의 공급부족과 중앙으로부터의 보급이 원활히 지급되지 못하면서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생계유지를 위한 다양한 행태변화를 형성하였고, 환자들은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비공식적인 비용 지불이 이뤄지는 현상이 고착되었다. 무상치료의 시스템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뒷돈을 준 경험이 45%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는 무상치료를 위한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설명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4〉 의료기관 이용경험 중 뒷돈 준 경험

(단위: %)



중앙집권적 보건의료공급체계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공식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제한은 비공식적인 의료시장(진료 및 의약품 구매 모두를 포함)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본 연구에서 진행하였다.

## 2) 경제적 여건에 따른 보건의료 접근성의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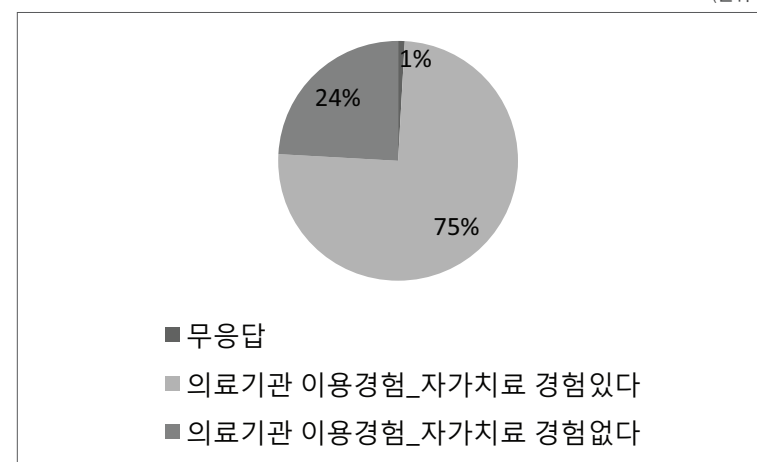
### 자가치료 경험 여부, 장마당 및 약국 통한 약구매 사유

북한에서 호담당 의사, 진료소, 병원 개인 의사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치료를 하거나 약을 먹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75%가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장마당 또는 개인 약국에서 약을 구

입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90%의 '그렇다'라는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 외의 장소에서 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었고, 의사와의 논의 없이 치료 또는 필요한 약을 선택하여 구매한 경험이 있었다.

〈그림 4-5〉 의료기관 이용경험 중 자가치료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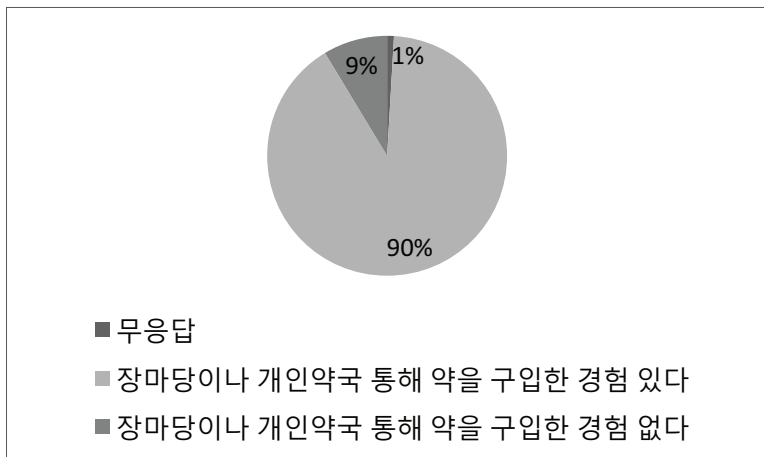
(단위: %)



장마당이나 개인약국을 통한 약의 구매경험을 조사한 연구가 2011년에도 북한이탈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적이 있다. 당시 조사결과에서는 69%의 응답자가 구매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2011년과 비교하여 장마당이나 개인약국의 이용경험은 확연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공식 의료시장의 형성이 1990년 중반부터 이뤄졌다면, 2000년과 2010년 이후의 기간을 거쳐 범위가 확산되고 공식화되었다. 이제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약국들이 존재하며, 의약품을 국영 약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구매될 수 있는 의료시장이 마련되었다.

〈그림 4-6〉 장마당이나 개인약국 통해 약을 구입한 경험

(단위: %)



#### 4. 평가와 시사점

진료를 받기 위해 뒷돈을 쥐야 하는 경험을 45%에서 하였고, 경제적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진료 거절의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무상치료의 만족도는 50%이상에서 부정적이었다. 자가치료의 경험자가 75%였고, 약 구매를 위한 장마당 이용자는 90%에 달하였다. 결국 북한에서 무상치료의 기능은 최소한으로 유지된 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에 격차가 생기고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현상은 꽤 오래전부터 알려졌고, 공공 의료영역 외의 의료시장이 의료서비스 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지 오래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적 격차로 인한 빈곤층의 형성과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형성은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들어낼 수 없는 취약계층이므로 이들을 위한 공식적인 외부 지원도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2005년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대북지원의 방향 선회를 요청하였고, 이 시점부터 의약품이나 물품 지원의 비율은 줄고 지역 단위의 자체적 생산력 강화를 위한 외부 지원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식량안보의 강조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인 식량생산과 이를 통한 자립이 가능할 수 있는 식량개발지원이 2010년 이후 해외 NGO들의 주요지원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지역별 자립 및 자체적 생산역량 강화를 통해 공공영역의 공급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으로 파악된다. 이는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적용되는 현상일 것이다. 정부와 공공의 역할이 감소되었고 지역별로 자체적인 의료물품의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의학 및 민간요법이 활성화되었으며 군 단위 기관 및 조직에서 해외 NGO 및 단체와 직접 교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빈부격차와 의료 사각지대, 빈곤으로 인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식적인 지표나 자료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은 비공식 의료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보건의료 영역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조사는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이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경향성 분석이 함께 이뤄진다면 노출되지 않은 북한의 보건의료적 문제점들을 정밀히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5장  
총론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제5장 총론

### 결장

2019년 북한 사회변동조사의 결과를 두고 볼 때, 김정은 정권 하에 서의 북한 사회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크게 눈에 띄는 하락세나 변화상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대북제재와 농업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곡물 공급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올해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북한 내 확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북한 내 곡물생산의 하락세에 대한 국제기구의 예측을 고려할 때 내년 조사에서는 식생활의 수준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산 상품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인다. 이와 더불어 남한 물건 사용경험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2018-2019년 남북 관계의 개선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으나 올해 조사대상자의 북한에서의

경제적 상황이 전년보다 나아진 것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어 앞으로의 추세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올해 처음 포함된 살림집 내 내구재 보유 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고가의 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북한주민의 소득 및 소비의 현실적 수준이 일반적 평가를 상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제한적 전기공급에도 불구하고 가구당 가전제품 보유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 내에서 태양광패널을 이용한 자가발전의 확산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유가 직접적인 사용과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행할 때, 면밀하게 응답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

북한 내 휴대전화 보유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터넷 접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내부망인 인트라넷 사용도 제한적인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휴대폰 보유율의 증가와 정보 접근도의 개선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세대 및 도농, 도시 간 정보화의 격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 간 생활 격차는 소비생활의 양태에서의 차이로 이어지는데, 이를 통해 계층 간 “구별짓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북한사회변동 조사가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이다.

북한의 시장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층분화에 대한 인식이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제적 요인에 따른 격차는 계층 간 뿐 아니라 지역 간에도 드러나는데, 김정은 정권 하에서 주요 경제개발지대로 주목받은 지역에 대해 북한주민들의 평가는 오히려 낮게 나온 점은 흥미롭다. 최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삼지연시의 혁명도시로의 개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이 앞으로의 조사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취업형태와 관련하여 다인 가족 중 직장인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동시에 직장급여외 부수입이 늘고 있는 것은 장마당 등을 통해 장사에 관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뇌물에 들어가는 비용과 뇌물에 대한 고민이 높게 나타나는 점, 관리자에 의한 부정에 대한 인식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주의 적 구조와 관습에 의해 자본주의적 경쟁과 시장화 등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비효율적 상황에 대한 불만감이 주민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올해 처음 포함된 북한 보건의료체제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여전히 진료를 받기 위해 뇌물을 줬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과반 이상이 부정적이었다. 무상치료의 내실은 떨어지고 있으며, 장마당 등을 통한 약 구입을 비롯한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이후 북한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지원에서의 인도적 지원 부분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보건의료의 영역에서는 비공식시장의 역할이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적 여건에 따른 의료서비스에의 접근도의 차이 발생, 그리고 그에 따른 의료 취약층의 증가는 앞으로 북한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가 누적됨에 따라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다.

부록  
설문지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NO.

**연구과제명 : 2019 북한사회변동조사**  
**연구책임자명 : 임경훈 교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북한사회변동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본 연구가 왜 수행되고 어떤 내용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의사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 담당 연구원이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 조사의 목적은 2018년에 귀하께서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의식주 생활, 경제생활, 소비생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 2018년에 북한에서 살다가 나오신 만18세 이상인 분들 중 100여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 귀하는 본 설문지를 읽고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여 응답하시면 됩니다.

###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약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 예, 귀하께서는 설문조사를 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귀하께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면 언제든지 설문조사를 멈출 수 있으며, 그때까지 작성하신 설문지는 즉시 폐기 처리되며 귀하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 6.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 아니요, 귀하는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더라도 귀하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에 통보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7.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 이 연구에 참여해주신 것에 대한 사례로 4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 8.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 이름: 천경효 선임연구원 · 전화번호: 02-880-8865

-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써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 전화번호: 02-880-5153

### 9. 연구에 대해 얻은 모든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임경훈 교수(02-880-1325)입니다. 설문지 원자료는 연구책임자가 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통일부 특수자료 관리 규정에 준하여 이중 철재 보관함에 넣어 연구책임자의 연구실(통일평화연구원 209E호)에 1년 간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즉시 폐기합니다. 이 외에 사례비 지급을 위해 설문참여자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수집되며 이 정보는 사례비 지급과 동시에 폐기됩니다. 2차 코딩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보관할 예정입니다.

2019 북한사회변동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동의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임경훈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북한을 떠나오기 전 본인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 표시해 주세요.

**문1** 북한을 떠나오기 전 약 1년 동안의 귀하의 식생활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

**(1)** 보통 하루 몇 끼를 먹었습니까?

- ① 하루 세 끼 이상
- ② 하루 두 끼
- ③ 하루 한 끼
- ④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많았다.

**(2)** 식사를 할 때 보통 입쌀과 강냉이를 어떤 비율로 섞어 드셨습니까?

- ① 거의 입쌀로만 먹었다.
- ② 입쌀 위주로 강냉이를 섞어 먹었다.
- ③ 입쌀과 강냉이를 반반 섞어 먹었다.
- ④ 강냉이 위주로 입쌀을 섞어 먹었다.
- ⑤ 거의 강냉이로만 먹었다.
- ⑥ 기타 (적어주세요: )

**(3)** 고기(육고기와 물고기 포함)를 얼마나 자주 드셨습니까?

- ① 거의 매일 먹었다.
- ②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
- ③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
- ④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먹었다.

⑤ 먹은 적이 없다.

**(4)** 귀하가 북한을 떠나기 전, 1년 동안 귀하의 식생활 형편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어느 것입니까?

- ① 우리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 ② 우리 가족 모두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지 못했다.
- ③ 가끔 먹을 것이 부족했다.
- ④ 자주 먹을 것이 부족했다.

**문2** 북한을 떠나오기 전 약 1년 동안의 귀하의 의생활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

**(1)** 옷을 얼마나 자주 사 입으셨습니까?

- ① 한 달에 한두 벌 정도 또는 더 자주
- ② 계절마다 한두 벌 정도
- ③ 1년에 한두 벌 정도
- ④ 몇 년에 한두 벌 정도
- ⑤ 산 적이 없다.

**(2)** 입을 옷은 주로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 ① 장마당(시장)에서 사 입음
- ② 국영상점(직매점 포함)에서 사 입음
- ③ 백화점 또는 외화상점에서 사 입음
- ④ 직접 또는 친척을 통해 외국에서 사 입음
- ⑤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음
- ⑥ 기타 (적어주세요: )

**(3)** 입을 옷은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까?

- ① 북한
- ② 중국
- ③ 남한
- ④ 일본
- ⑤ 러시아
- ⑥ 기타 (적어주세요: )

**문3** 북한을 떠나오기 전 약 1년 동안 귀하가 살았던 살림집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

**(1)** 어떤 형태의 살림집에서 사셨습니까?

- ① 아파트
- ② 하모니카집(연립주택)
- ③ 독집(단독주택)
- ④ 기타 살림집(적어주세요: )

**(2)** 살았던 살림집은 어떻게 장만했습니까?

- ① 국가에서 배정받음
- ② 돈 주고 샀음
- ③ 직접 지었음
- ④ 조상 또는 부모로부터 받음
- ⑤ 친척이나 주변 사람한테 받음
- ⑥ 기타(적어주세요: )

**(3)** 다음 중 살림집에 있었던 것을 모두 골라 표시해주세요.

- ① 텔레비전
- ② 냉장고(냉동고 포함)
- ③ 전기밥솥
- ④ 세탁기
- ⑤ CD 플레이어(알판 재생기, 노트텔, 녹화기 포함)
- ⑥ 집전화
- ⑦ 손전화(휴대전화)
- ⑧ 컴퓨터(노트북 포함)
- ⑨ 자전거
- ⑩ 오토바이
- ⑪ 가축(집짐승)
- ⑫ 텃밭

**문4** 북한에 살았던 당시 귀하의 생활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

**[1]** 북한에서 본인의 손전화가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질문 (1)-1로 이동)
- ② 없었다 (☞ 질문 (2)로 이동)

**[1]-1** 손전화기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습니다습니까?

- ① 장사 또는 사업일
- ② 일상적 대화나 소식 주고받기
- ③ 직장 등에서 공적인 업무
- ④ 사진 찍기, 동영상 촬영, 놀이(게임) 등 오락용
- ⑤ 기타(적어주세요: )

**[2]** 북한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질문 (2)-1로 이동)
- ② 없었다 (☞ 질문 (3)으로 이동)

**[2]-1** 컴퓨터는 주로 어디에서 이용하였습니까?

- ① 공공기관(도서관, 학교, 직장)
- ② 본인의 집
- ③ 이웃, 친척, 친구의 집
- ④ 기타 (적어주세요: )

**[3]** 북한에서 인터넷(해외접속이 차단된 북한 내부망)을 사용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질문 (3)-1로 이동)
- ② 없었다 (☞ 질문 (4)로 이동)

**[3]-1** 인터넷을 주로 어디에서 이용하였습니까?

- ① 공공기관(도서관, 학교, 직장)
- ② 본인의 집
- ③ 이웃, 친척, 친구의 집
- ④ 기타 (적어주세요: )

**[4]** 북한에서 남한산 물건을 사용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질문 (4)-1로 이동)
- ② 없었다 (☞ 질문 (5)로 이동)

**[4]-1** 사용해 본 적이 있던 남한산 물건에 표시해 주세요.

- ① 의류
- ② 식품
- ③ 잡화(화장품, 신발, 시계, 귀금속 등)
- ④ 가전제품(TV, 라디오, 밥솥, 녹화기, 손전화기, 컴퓨터 등)
- ⑤ 기타(적어주세요: )

**[5]** 일상에서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돈 버는 것
- ② 보안원/보위부 각종 단속(손전화, 탈북, 마약, 비사검열 등)
- ③ 간부에게 뇌물 고이는 것
- ④ 조직생활
- ⑤ 출세
- ⑥ 자녀 교육
- ⑦ 기타(적어주세요: )

**[6]** 가정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남편과 부인 중 누가 주로 결정하였습니까?

(기혼자의 경우는 본인의 경우에 대하여, 미혼자의 경우는 부모님의 경우에 대하여 답해주세요)

- ①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하였다.
- ② 남편이 주로 결정하되 부인과 함께 상의하였다.
- ③ 부인이 주로 결정하되 남편과 함께 상의하였다.
- ④ 남편과 부인이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 ⑤ 부인이 전적으로 결정하였다.

**[7]**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 돈을 주고 자녀에게 따로 과외공부(개인강습)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질문 (7)-1로 이동)
- ② 없었다 (☞ 질문 5로 이동)

**[7]-1** 자녀에게 시킨 적이 있는 과외공부(개인강습)가 있으면 모두 골라 표시해주세요

- ① 음악(악기, 성악 등)
- ② 외국어(영어, 중국어, 러시아 등)
- ③ 컴퓨터
- ④ 체육
- ⑤ 무용
- ⑥ 교과목(수학, 물리, 화학 등)
- ⑦ 기타 (적어주세요: )

**문5**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월평균 수입 중에서 아래 제시된 것들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예시에 나온 것처럼 적어주세요.

(※ 총 100%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숫자로 숫자로 적어주세요.)

\* 예시: 총합: 100%

- ① 먹는 것 (30%)
- ② 입는 것 (10%)
- ③ 살림집 (20%)
- ④ 자녀교육 (10%)
- ⑤ 저축 (15%)
- ⑥ 문화생활 (10%)
- ⑦ 기타 (5%)

- ① 먹는 것 ( )
  - ② 입는 것 ( )
  - ③ 살림집 ( )
  - ④ 자녀교육 ( )
  - ⑤ 저축 ( )
  - ⑥ 문화생활 ( )
  - ⑦ 기타 ( )
- ☞①~⑥에 사용한 것 이외의 모든 것(병원비, 약값, 교통비, 통신비 등)을 합한 액수를 비율로 적어주세요.

**문6** 귀하는 북한을 나오기 직전에

북한주민의 계층 비중이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층, 중층, 하층의 총합이 100%가 되도록 적어주세요.)

상층(        %),  
중층(        %),  
하층(        %)

**문7**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아래 상자 안에 제시된 지역들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도, 가장 못 사는 도를 하나씩만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① 평안남도    ② 평안북도
- ③ 함경남도    ④ 함경북도
- ⑤ 자강도        ⑥ 양강도
- ⑦ 황해남도    ⑧ 황해북도
- ⑨ 강원도

(가) 가장 잘 사는 도 (        )  
(나) 가장 못 사는 도 (        )

**문7-1** 그림, 평양을 제외하고 아래 상자 안에 제시된 지역들 중에서 가장 잘 사는 시, 가장 못 사는 시를 하나씩만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① 신의주    ② 청진    ③ 라선
- ④ 혜산      ⑤ 원산    ⑥ 남포
- ⑦ 평성      ⑧ 사리원   ⑨ 개성

(가) 가장 잘 사는 시 (        )  
(나) 가장 못 사는 시 (        )

**문8**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어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잘산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래 상자 안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잘 사는 순서대로 2개를 골라 해당 괄호 안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 ① 중앙당 간부
- ② 지방당 간부
- ③ 법기관(보위부, 안전부, 검찰 기관) 간부
- ④ 인민위원회 간부
- ⑤ 전문직(의사, 교수, 기술자 등)
- ⑥ 외화벌이
- ⑦ 군관
- ⑧ 시장 상인(장사)
- ⑨ 기업소·공장 간부
- ⑩ 기업소·공장 노동자
- ⑪ 농장 관리일꾼
- ⑫ 농장원

(가) 가장 잘 사는 직업  
1순위(        ), 2순위(        )  
(나) 중간 정도 사는 직업  
1순위(        ), 2순위(        )

(다) 가장 못 사는 직업  
1순위(        ), 2순위(        )

**문9** 귀하는 현재 북한에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으로 나뉘는 차이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세 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하나씩 적어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정치사상성의 차이 때문에
- ② 본인 직위의 높고 낮음 때문에
- ③ 교육 수준의 차이 때문에
- ④ 가족관계(친척 포함) 때문에
- ⑤ 권력층과의 안면관계 때문에
- ⑥ 사는 지역의 차이 때문에
- ⑦ 개인 성격 또는 자기 노력의 차이 때문에
- ⑧ 출신성분의 차이 때문에
- ⑨ 운수소관(자기 팔자 때문에)

**문10**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아래의 세 시기에 각각 자신의 생활수준이 어디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로 표시해주세요.

(가) 1994년~ 1999년	(나) 2000년~ 2004년	(다) 2005~ 2010년	(라) 2011년~ 탈북 전
① 상층	① 상층	① 상층	① 상층
② 중층	② 중층	② 중층	② 중층
③ 하층	③ 하층	③ 하층	③ 하층

**문11** 북한에 거주할 당시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중에서 몇 명이 직장에 나가고 있었고 국가로부터 받은 생활비의 총합은 북한 돈으로 얼마나 되었습니까?

가족 총수는 \_\_\_명이고 그 중 \_\_\_명이 직장을 나가 월 평균 총 \_\_\_\_\_원을 벌었다.

**문12** 북한에 거주할 당시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중에서 몇 명이 장사를 하거나 다른 부업(더벌이)을 했고, 그로부터 벌어들인 총 수입이 북한 돈으로 얼마나 되었습니까?  
(※ 만일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 중 아무도 장사나 다른 부업을 한 사람이 없었으면 0원이라고 써주세요.)

가족 총수는 \_\_\_명이고 그 중 \_\_\_명이 장사나 부업으로 월 평균 총 \_\_\_\_\_원을 벌었다.

**문13**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벌어들인 전체 수입 중에서 각종 뇌물로 고인 액수의 비율은 얼마나 되었는지 골라주세요.

- ① 10% 이하
- ② 20% 이하
- ③ 30% 이하
- ④ 40% 이하
- ⑤ 50% 이하
- ⑥ 50% 이상
- ⑦ 전혀 없음

**문14**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은 일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한 개를 골라 √로 표시해주세요.

(※ 위의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15번 질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 ① 소매장사 (시장 매대장사, 달리기, 행방 등)
- ② 개인 편의봉사 (이동 미용사, 전자제품 수리공, 집 수리공 등)
- ③ 개인 (임)가공 (의류, 신발, 가구 제작 등 가내 수공업)
- ④ 식당, 상점 임대 운영
- ⑤ 되거리장사 (차판장사, 도매장사)
- ⑥ 외화벌이 계통 (수출 원천동원이나 대치물자 수입 등 포함)
- ⑦ 돈장사
- ⑧ 샅벌이 (가대기군, 소토지 임시노력,

- 바다 임시노력 등)
- ⑨ 해외 파견노력 근무 (벌목, 건설, 식당, 의료사업 등)
- ⑩ 기타 (적어주세요: )

**문15** 위의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 ③ 1년 이상-3년 미만
- ④ 3년 이상-5년 미만
- ⑤ 5년 이상

**문15-1** 그렇다면, 장사 물건이나 사업용 원료, 자재는 주로 어느 나라 것이었습니까?

- ① 북한 ② 중국 ③ 남한 ④ 러시아
- ⑤ 일본 ⑥ 기타 (적어주세요: )

**문15-2** 장사물건이나 사업용 원료, 자재는 주로 어디서 구입하셨습니까?

- ① 공장기업소
- ② 무역회사
- ③ 밀수
- ④ 도매시장
- ⑤ 간부
- ⑥ 화교

**문16** 위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들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써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 ① 자신의 사업 수완 부족
- ② 사업자금(밀천)을 마련하는 일
- ③ 장사 물건이나 원료, 자재를 확보하는 일
- ④ 같은 업종의 경쟁자들이나 수입상품과의 판매 경쟁
- ⑤ 도로, 철도 사정
- ⑥ 전기 사정
- ⑦ 법기관의 단속이나 뇌물 고이는 일
- ⑧ 기타 (적어주세요: )

**문17** 위의 일을 할 때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고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17-1** 위 질문의 ①에 응답한 경우에만 답해 주십시오.

- (가) 연간 평균 몇 명을 고용했습니까? (약 명)
- (나) 연간 평균 얼마 동안 고용했습니까? (약 일 또는 개월)

**문18**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매우 반대
①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② 누구나 자유롭게 소비품을 만들어 팔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③ 누구나 자유롭게 공장이나 기업소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④ 누구나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⑤ 개인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문19**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북한 내부에서 찾는다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두 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써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 ① 근로자(평범한 노동자, 농민, 사무원 등)
- ② 관리자(당비서, 지배인, 기사장,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등)
- ③ 내각(총리, 상, 국가계획위원장 등)
- ④ 당 지도부
- ⑤ 군부
- ⑥ 최고영도자
- ⑦ 기타 (적어주세요: )

**문20**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북한이 잘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제시된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두 개를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써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 ① 사상성(수령·당에 대한 충실성, 자력갱생정신 등) 강화
- ② 과학기술 발전
- ③ 경제관리방법 개선
- ④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 ⑤ 자본주의 도입
- ⑥ 기타 (적어주세요: )

**문21**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전에 이용한 의료기관은 어떻습니까? (북한을 나올 때부터 3년 이내에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이 없다'를 선택해 주세요)

리 인민병원이나 진료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의료진과 약품, 의료기기 등이 충분했다.</li> <li>② 의료진과 의료기기는 충분했지만 약품이 부족했다.</li> <li>③ 의료진은 충분했지만 의료기기와 약품이 부족했다.</li> <li>④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li> <li>⑤ 이용한 경험이 없다.</li> </ul>
시·군 (구역) 인민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의료진과 약품, 의료기기 등이 충분했다.</li> <li>② 의료진과 의료기기는 충분했지만 약품이 부족했다.</li> <li>③ 의료진은 충분했지만 의료기기와 약품이 부족했다.</li> <li>④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li> <li>⑤ 이용한 경험이 없다.</li> </ul>
도 중앙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의료진과 약품, 의료기기 등이 충분했다.</li> <li>② 의료진과 의료기기는 충분했지만 약품이 부족했다.</li> <li>③ 의료진은 충분했지만 의료기기와 약품이 부족했다.</li> <li>④ 의료진, 약품, 의료기기 모두 부족했다.</li> <li>⑤ 이용한 경험이 없다.</li> </ul>

**문22**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 진료소(치과제외)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22-1번으로)
- ② 아니오
- ③ 병의원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문22-1** 북한에서 진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시간이 없어서
- ② 증상이 가벼워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
- ③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비가 부담되어서)
- ④ 교통편이 불편해 병의원 등에 가기 힘들어서
- ⑤ 병의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 ⑥ 병의원 등에 예약을 하기가 힘들어서
- ⑦ 진료(검사 또는 치료) 받기가 무서워서
- ⑧ 병원에 가도 적절한 장비가 없어 치료받을 수 없어서
- ⑨ 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어 치료받을 수 없어서
- ⑩ 기타 (적어주세요: )

**문23** 귀하는 호담당 의사, 진료소,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뒷돈(고인돈)을 내거나 선물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선물을 준 경우, 무엇을 주었는지 적어주세요:            )
- ② 아니오
- ③ 병의원 치료(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한 적이 없었다.

**문24**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 1년 동안 호담당 의사, 진료소, 병원 개인 의사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치료를 하거나 약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25** 귀하가 북한을 나오기 직전 1년 동안 장마당, 또는 개인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25-1** 본인이 장마당, 개인약국 등을 이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 ① 병의원, 진료소에 약이 없어서
- ② 병의원, 진료소에서 처방한 약을 사기 위해서

- ③ 병원, 진료소 약보다 효과가 좋아서
- ④ 기타 (적어주세요:                    )

**문26** 다음 시기 별 귀하의 키(신장 cm)와 몸무게(체중 kg)은 어떻게 됩니까?

	키(cm)	몸무게(kg)
오늘 현재	_____cm	_____kg
북한 출국 당시 _____년 _____월	_____cm	_____kg

**문27** 북한 병원에 약이 없어서 진료를 받기 어려워진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_\_\_\_\_년

**문28**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사회보장, 무상치료,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보통’,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골라 주십시오.

	매우 만족 한다	조금 만족 한다	보통 이다	조금 불만족 한다	매우 불만족 한다
① 사회보장	1	2	3	4	5
② 무상치료	1	2	3	4	5
③ 무상교육	1	2	3	4	5
④ 무상보육	1	2	3	4	5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46

## 북한사회변동 2019

**발행** 2020. 02. 28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임경훈  
**저자** 천경효·강채연·박상민·이혜원·정은미·임경훈·조용신  
**주소** 151-742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전화** 02) 880-4052-4, 874-7304  
**팩스** 02) 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디자인** (주)다해미디어 (02-722-7123)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

---

북한사회변동 2019 :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 보건  
저자: 천경효·강채연·박상민·이혜원·정은미·임경훈·조용신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p. : cm.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 46)  
권말부록: 설문지  
ISBN 979-11-966513-1-2 93340 : 비매품

---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